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763-01

연구보고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저 자 배상률, 심우민, 최현정

연구진 연구책임자_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_최현정(경북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_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연구협력관 최복림(교육부 사무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11

II. 관계부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현황 및 주요사업

- 1. 교육부 16
- 2. 방송통신위원회 23
- 3. 문화체육관광부 29
- 4. 시사점 36

II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체계 해외 동향

- 1. EU 44
- 2. 핀란드 48
- 3. 영국 54

4. 미국	58
5. 호주	65
6. 시사점	71

IV. 정책제언

1.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77
2.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의 체계성 강화	101
3. 미디어교육 지역 협의체 및 실천공동체(CoP) 지원 ..	108
4.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114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아카이브 구축	123
6. 지역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131

참고문헌	139
------------	-----

부록

1. 자문위원 리스트	149
-------------------	-----

표 목차

표 Ⅰ-1 주요 정보화 관련 분야의 국제 평가 결과	4
표 Ⅰ-2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8
표 Ⅱ-1 미디어교육 실시 기관 및 부처 현황	15
표 Ⅱ-2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18
표 Ⅱ-3 충청북도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20
표 Ⅱ-4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과 프로그램	24
표 Ⅱ-5 팩트체크 교육 대상별 주요 교육 내용	26
표 Ⅱ-6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28
표 Ⅱ-7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 모집 공고 내용 ..	28
표 Ⅱ-8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분야 및 주요 내용 ..	29
표 Ⅱ-9 주요 부처별 미디어교육의 비교우위 및 장점	36
표 Ⅱ-10 주요 부처별 미디어교육의 개선사항 및 단점	37
표 Ⅱ-11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40
표 Ⅲ-1 기업의 후원으로 제작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65
표 Ⅳ-1 주요 지자체의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	77
표 Ⅳ-2 미디어교육 관련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2007-2020)	79
표 Ⅳ-3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82
표 Ⅳ-4 중요도-성취도 IPA 분석결과	96
표 Ⅳ-5 미디어교육 정책 평가요인 가중치 및 우선순위(전체)	99
표 Ⅳ-6 미디어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노력	120

그림 목차

그림 Ⅰ-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디어 및 디지털기기 이용 시간 상승	6
그림 Ⅰ-2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비전 및 추진전략	9
그림 Ⅱ-1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추진전략	17
그림 Ⅱ-2 미리네(학교 미디어교육 통합지원 포털) 첫 화면	19
그림 Ⅱ-3 K-MOOC 강좌찾기 홈페이지	22
그림 Ⅱ-4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홈페이지	27
그림 Ⅱ-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통합지원사이트 '포미' 홈페이지	34
그림 Ⅱ-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35
그림 Ⅳ-1 정책의 중요도-성취도 IPA 분석결과(전체)	98
그림 Ⅳ-2 산학연관 협력 미디어교육 연속 세미나	110
그림 Ⅳ-3 대구·경북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공동 개최	111
그림 Ⅳ-4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 추진 목표와 내용	112
그림 Ⅳ-5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팩트체크 교육 가이드 자료	116
그림 Ⅳ-6 한국언론진흥재단 포미 (문체부 산하)	126
그림 Ⅳ-7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127
그림 Ⅳ-8 미디온과 아인세	128
그림 Ⅳ-9 교육부 미리네 및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129
그림 Ⅳ-10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131
그림 Ⅳ-11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부처 간 시스템 구축	13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물인 스마트폰의 보유율을 보더라도 2011년까지 전체 인구의 30% 미만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15년에 78.8%,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93.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우리나라는 일찍이 정보화를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삼고 정보화 기반 시설을 발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지난 20세기 말엽의 ‘디지털 혁명 시기’(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기라 명명된 ‘초연결 지능화 시기’에도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UN), 세계경제포럼(WEF)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관련 지수에 있어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표 I-1〉 참조).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가 13위를 차지하였는데,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하위지수 중 하나인 ICT 도입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92.8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ICT 도입지수의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팹케이블 인터넷 가입 수는 1위,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수 6위, 인터넷 이용자 수 9위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대

한민국정부, 2020).

표 1-1 주요 정보화 관련 분야의 국제 평가 결과

[작성기관] 지수명	작성 목적	우리나라 순위(조사 대상 국가 수)							주요국 최근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ITU] ICT 발전지수	• 국가별 정보사회의 발전정도 및 선진국-개도국 간 정보격차를 측정	2위 (166)	1위 (167)	1위 (175)	2위 (176)	-	-	-	아이슬란드 1위 한국 2위 스위스 3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 국가별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준비 상태와 역량을 측정(격년)	1위 (193)	-	3위 (193)	-	3위 (193)	-	2위 (193)	덴마크 1위 한국 2위 에스토니아 3위
[UN] 온라인 참여지수	• 국가별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 측정(격년)	1위 (193)	-	4위 (193)	-	1위 (193)	-	1위 (193)	한국, 에스토니아, 미국 공동 1위
[OECD] 공공데이터 평가지수	•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 지수로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측정	-	1위 (30)	-	1위 (31)	-	1위 (32)	-	한국 1위 프랑스 2위 아일랜드 3위
[WEF] 국가경쟁력 지수 ICT 도입 지수	• 국가경쟁력지수의 ICT 도입(채택) 수준 측정 •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수 개편(2018년)	-	-	-	-	1위 (140)	1위 (141)	-	한국 1위 아랍에미리트 2위 홍콩 3위
[IMD] 디지털경쟁 력 지수	• 기술변화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기술개발 능력, 미래 준비 정도 평가(2017년 처음 발표)	21위 (63)	18위 (63)	17위 (63)	19위 (63)	14위 (63)	10위 (63)	-	미국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ITU] 사이버 보안지수	• 사이버보안을 구현·촉진하기 위한 노력 수준 평가 •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책, 역량 구축, 국제적 협력 등 측정(2015년 처음 발표)	-	5위 (105)	-	13위 (134)	15위 (155)	-	-	영국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주: 연도는 보고서 발표 기준일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최신 자료로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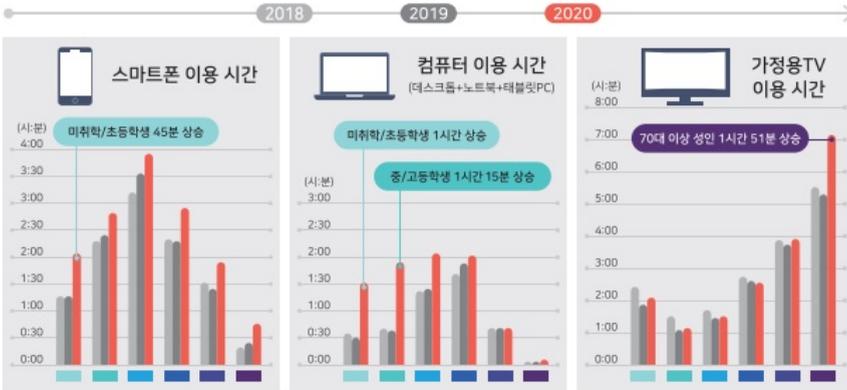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 2020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567

이 같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디어 이용 시간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온라인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사교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유튜브, SNS 등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그림 I-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전년도 대비 28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8분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있어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의 이용시간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2020년 기준 미취학 및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45분 증가하여 하루 평균 2시간가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 재학생들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비실시간 영상 시청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미취학 및 초등학생은 1시간 19분, 중고등학생은 1시간 16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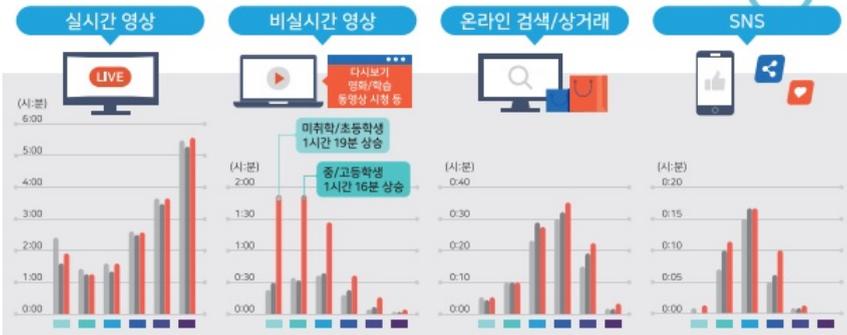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은 조사 대상 패널의 절반이 넘는 5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처음 SNS 이용률이 43.1%를 기록한 이래 2019년(47.7%)까지 5년 간 40%대에 머물던 이용률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3시간 10분으로 타 매체에 비해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70대 노년층에서 2019년도에 비해 1시간51분 더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스마트폰, 컴퓨터, 가정용TV의 하루평균 이용시간도 상승
 전년대비 하루평균 이용시간 스마트폰 28분, 컴퓨터 13분, 가정용TV 8분 증가
 특히, 고등학생 이하 컴퓨터 이용시간 전년대비 1시간 이상 큰 폭 상승



기준 : 2018~2020년 각 년도 개인 설문 응답자 (전체 응답자 기준 연령대별 해당 미디어 평균 이용 시간 산출, 단위: 시,분)

영상시청, 온라인 검색 및 상거래, SNS 이용시간도 전반적으로 상승
 실시간 영상보다는 비실시간 영상(VOD 등) 시청시간의 상승폭 크게 나타나
 고등학생 이하 비실시간 영상 평균 시청시간 또한 전년대비 1시간 이상 큰 폭 상승



기준 : 2018~2020년 각 년도 개인 설문 응답자 (전체 응답자 기준 연령대별 해당 미디어 행위 평균 이용 시간 산출, 단위: 시,분)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p.19

그림 |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디어 및 디지털기기 이용 시간 상승

이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미디어 이용 시간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과의존, 가짜뉴스, 인포데믹(infodemic)¹⁾,
 에코 챔버(echo chamber)²⁾, 사이버폭력(cyber bullying) 등 미디어 이용에 따
 른 다양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한다.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
 서 2020년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2020년도 성인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65.8%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또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 통신에의 접근 가능성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
 가정 간, 지역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오미영, 2013) 디지털 격차는 교육 격차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 요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등학생 4~6학년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글, 파워포인트, 코딩 등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과
 주요 디지털 기기 보유율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외, 2020). <표 I-2>에 나타났듯이, 디지털격차 문제는
 고령층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일반국민의 평균 디지털정보화

1) 정보(information)과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나 소문 등이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걸잡을 수 없는 전염병과 흡사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
 2) 뉴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자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점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지속적으
 로 수용하며 기존의 관점과 신념이 강화되고 증폭되는 현상을 의미함.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고령층의 수준은 68.6%에 머물렀다.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전년도 대비 모두 6%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고령층은 4.3% 포인트 증가하며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표 1-2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장애인	70.0	74.6	75.2	81.3
저소득층	81.4	86.8	87.8	95.1
농어민	64.8	69.8	70.6	77.3
고령층	58.3	63.1	64.3	68.6
취약계층 평균	65.1	68.9	69.9	72.7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 취약계층 평균은 각 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19

정부는 2020년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20)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계 부처는 비대면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디지털 격차와 오남용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간이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추진배경이다.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 미디어교육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범부처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거시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맞춤형 교육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란 비전 아래 ①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②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③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④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이란 4대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I-2) 참조).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p.9

그림 I-2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비전 및 추진전략

이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범부처 민관협의체인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협의체'의 구성·운영 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정부, 미디어교육 기관, 전문가학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이 협의체가 맡아 지금까지 부처 간 분절적 미디어교육 정책추진에 따른 폐단을 막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이 발표된 이래 해당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간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의 협업사례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관계부처 간 독자적·분절적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저해,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정책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재 외(2017)는 미디어교육을 위해 미디어교육 소관 부처들의 양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단순해 보이는 해결방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부처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특성을 들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와 개인(유아, 초중고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미디어교육 정책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부터 여러 번 이뤄져 왔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 했었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총괄 부처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범부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수 부처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란 현안 해결을 위해 부처 간 면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2. 연구내용

1) 부처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의 핵심 주체로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국내 미디어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해당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와 각종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 담당자 및 현장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강사와 학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체계 해외동향

미디어교육에 관한 추진체계는 실상 각국의 정부 구조나 교육을 바라보는 국가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저마다의 추진체계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그들의 장점을 한국사회의 제도적 여건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미디어교육 선진지인 EU, 핀란드, 영국, 미국, 호주의 정책 추진체계를 살폈다.

3)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고유과제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기관 담당자, 교·강사, 학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정책제언의 해당 영역에 각각 제시하였다. 참고로, 연구진은 5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면접조사를 했으며, 그 중 본 보고서에 인터뷰 내용이 직접 인용된 자문위원들의 리스트를 정리하여 부록에 실었다.

4) 정책 제언

전술한 일련의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법제 정비, 협의체 구성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지막 장에 제시하였다.

○———— 제2장 관계부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현황 및 주요사업

- 1. 교육부
- 2. 방송통신위원회
- 3. 문화체육관광부
- 4. 시사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현황 및 주요사업

〈표 II-1〉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산하기관들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 미디어교육 실시 기관 및 부처 현황

기관명	중심교육	주관부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리터러시, NI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리터러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격차해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리터러시 콘텐츠 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 윤리의식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부/시도교육청

※ 주: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 자료: 김양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세미나, 2017년 2월 13일, 36쪽.

* 출처: 김여라(201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이 미디어교육 실시 기관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사업을 수년 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국 각 시도의 교육청들은 이 두 기관들이 학교 미디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수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미디어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외에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영역에 특화된 미디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인터넷 리터러시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불평등 해소, 인터넷윤리 교육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에 치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최근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1. 교육부

교육부는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이다. 교육부는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란 비전과 ‘모든 아이들의 비판적 이해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창의·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보편적 미디어 교육 실현’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부처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다(교육부,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②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③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④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란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림 II-1] 참조).

추진전략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② 미디어 선택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개발 지원 ③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주시민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② 창의·융합적 사고력 키우는 미디어 교육 지원 ③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원 ④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원 연수 실시 ② 맞춤형 미디어 교원 연수 확대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칭)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② 교육부-시·도교육청-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미디어 교육 ③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

* 출처: 교육부(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p.2

그림 II-1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추진전략

〈표 II-2〉는 정책 영역이나 정책 대상별로 2020년에 교육부가 추진한 세부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 및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경기, 대구, 충북 교육청이 선정되어 2022년과 2023년에 개관을 각각 앞두고 있다.

표 II-2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정책영역 및 정책대상	세부사업내용	성과 및 개선사항
학교미디어 교육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추진('22. 1곳, '23. 2곳 개관 예정) -미디어교육 통합지원 포털 구축('20.12. 개설)
	교육과정 개선 방안 검토	-정책연구(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학생 및 교원	교수학습자료 보급	-초중등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21. 2. 온오프라인 보급) -초,중,고 민주시민핵심역량 연계 미디어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21년 12월 온오프라인 보급 예정) -원격수업 지원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윤리 및 저작권 등 원격수업 관련 웹포스터(4종) 및 영상(1종) 보급
교원	교원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개발 및 보급 -정책연구(교원 및 예비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추진 및 결과 보급(~'20.12.)
교원 및 학부모	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교육부 소셜미디어 등 통한 정책 홍보 -정책 수요 조사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실시 ('20.9.9.-9.15.)
학부모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도 제고 및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학부모 대상 원격연수 콘텐츠(15차시) 개발·보급* 및 웹진에 미디어교육 관련 기고, 타 부처 개발 자료 공유 등 -“클릭! 미디어 리터러시” (학부모On누리탑재) '20.11. 기준 1,200명 이용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위한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국문/영문) 보급

* 출처: 배상률 외(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p.60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 원자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장은주 연구사 서면자문(2020.12.7.) 자료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직속기관형과 협력기관형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미디어 체험공간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기능을 갖춘 시설이며,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 교육센터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기존 미디어센터 및 공공도서관 등 관련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손잡고 학교 미디어교육의 통합지원 포털인 '미리네'(miline.or.kr)를 2020년 12월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그림 II-2) 참조). Media & Information Literacy Network for Education을 의미하는 미리네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각종 자료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제, 유관기관 등의 각종 정보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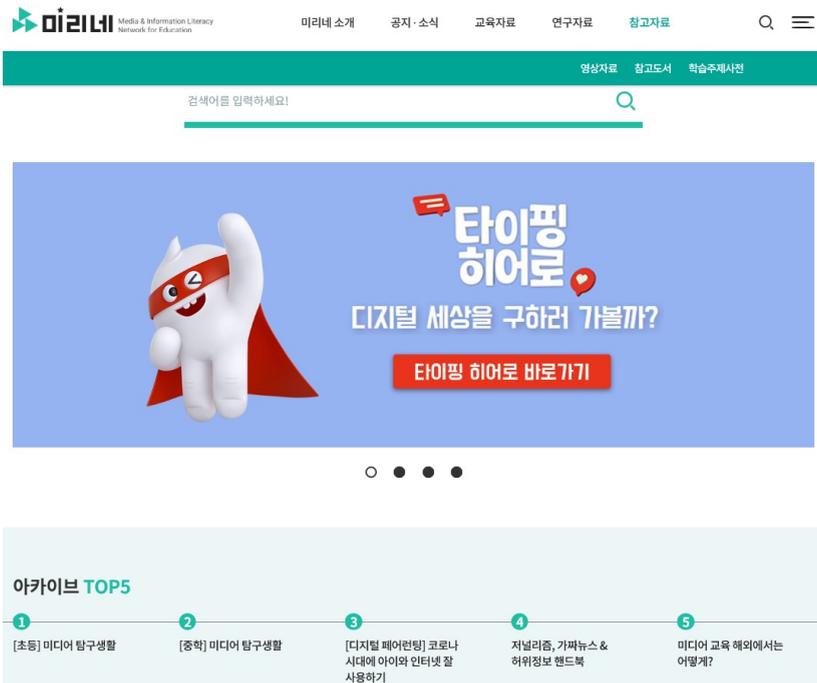


그림 II-2 미리네(학교 미디어교육 통합지원 포털) 첫 화면

* 출처: 미리네 홈페이지. <http://www.miline.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앞서 살핀 교육부 주도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이외에 17개 시·도 교육청은 제각각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은 그 중 최근 들어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교육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2020년도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3 충청북도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사업내용	성과 및 개선사항
인터넷 신문 활용 교육 지원	38교(초 10교, 중 12교, 고 16교), 교당 2,000천원 지원
미디어교육 교원연수 운영	충북교사 초중고 교원 대상 연수(전체 예산: 14553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교사 영화제작 직무연수 (49명) - 충북교사 영화제작 특강(온라인) (1,056명) - 3일만에 영화만들기 연수 (147명) - 이틀만에 배우는 영화편집 연수 (59명) - 하루만에 배우는 영화편집 연수 (44명)
미디어교육 교육연구회 운영	충북 교사 영화제작 교육연구회, 충북 교사 영화활용 교육연구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학교 운영	3교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제작 장비 대여 및 활용 교육	25교
제1회 충북교육영화제 개최	12.5~6 이틀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도내 학생 및 교직원 제작 영화 57편 출품, 46편 상영

* 출처: 교육부(2021). 전국 시도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 협의회 내부자료, p.25., 충북 교육청의 신미경 장학사 작성 내용을 연구진이 편집

충북 교육청의 2021년도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운영 사업으로 미디어 제작 교육 교원연수 운영과 교육연구회(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화제작 교육) 운영, 충북교육영화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전술한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설계공모가 2021년 이루어지며 2023년 12월 완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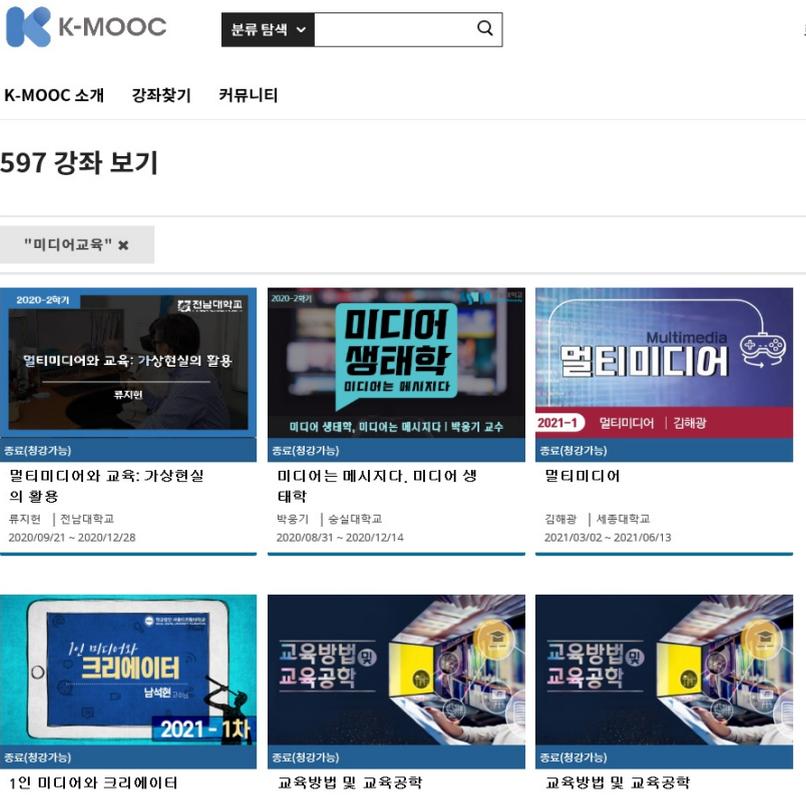
목표로 하고 있다.

전술한 충북지역 교원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충북교육청의 예산(50,000천원)으로 충북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blended) 연수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2021). 강사진은 교수, 초중등 교사,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강사,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충북 교육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교육청들은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하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원 미디어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영역 외에도 유아교육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에 관한 주무부처이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미디어교육의 영역까지도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성인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평생교육정책 실행을 통한 국민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특허,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에 걸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K-MOOC³⁾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평생교육에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김광재 외(2017)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별 미디어의 창의적 활용 역량은 21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평생교육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취지도 '사회통합과 시민력 향상', '인적자본의 확충' 등 평생교육진흥원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3) MOOC(무크)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개강좌를 의미함. K-MOOC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000개 이상의 강좌가 제공됨.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사회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 및 가시적인 성과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K-MOOC에서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강좌를 찾으면 ‘멀티미디어와 교육: 가상현실의 활용,’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 생태학,’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등의 극히 소수의 강좌가 검색이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미디어 활용교육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그림 II-3) 참조).



* 출처: 국가평생교육원 K-MOOC. http://www.kmooc.kr/courses?search_query=미디어교육/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그림 II-3 K-MOOC 강좌찾기 홈페이지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미디어교육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가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미디어교육은 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1년 5월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부산광역시와 2007년 광주광역시에 먼저 구축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후 강원(2014년)과 대전(2014년), 인천(2014년), 서울(2015년), 울산(2016년), 경기(2019년), 충북(2020년), 세종(2020년)에 차례로 들어섰다. 또 경남은 2023년, 전남과 전북은 2024년 건립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이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1년 6월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과 광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노무현 정부 때 전액 국비로 구축되었지만, 그 이후 건립된 센터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와 시설은 방통위가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운영비도 방통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체험과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센터들은 아래 사례처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공통 사업 (예를 들어, 미디어교육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체 미디어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4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과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정책대상	세부사업내용
학교 미디어교육	중·고등학생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 : 뉴스, 광고, 라디오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통한 진로탐색교육(14개교, 15차시 이내)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청소년 미디어 체험 및 방송인 진로특강 (8개교, 2차시) - 학부모 미디어교육 :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1인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2회) - 동아리 미디어교육 : 뉴스, 단편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집중제작 (8개교, 16차시) - 전교생 원데이 미디어 리터러시(5개교)
상설 미디어교육	시민	온오프라인 병행 미디어교육(미디어온) -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유형(영상,라디오,사진 등)에 따른 제작 교육, 비정기적 특강 - 총22강 67차시
미소 프로젝트	장애인 노인	- ○○ 지역 장애인, 노인 단체·기관 대상 -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 향상, 사회참여, 인식개선 등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총 7개 단체, 66회), 미디어 제작과 리터러시 교육 - 장애인(4곳) : 특수학급, 학교,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 단체 - 노인(3곳) : 노인복지관
이음 프로젝트	이주민 학교밖 청소년 여성(노인)	- ○○ 지역 이주민(3곳), 학교밖청소년(2곳), 여성 단체(1곳)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총 6개 단체, 56회) - 이주민: 이주여성·아동·부모, 영상 제작 및 비평 교육(28회) -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대상 브이로그 제작 교육(18회) - 여성: 은퇴 노인 여성 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10회)
씨앗별 프로젝트	유아	- 유아기 일상생활 속 놀이로 배우고 만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 -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통능력 함양 - 유치원 5곳 8차시
미리미리 학교	강사	- 강사풀 등록 강사 대상 미디어교육 연수 - 비정기적 운영 - 미디어 제작, 교수법, 이론, 교육 경험 나누기 - 교육 영역(교육 참여자의 문화적 특징)에 따른 워크숍 운영

방통위는 시민들의 미디어 권익 및 시청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먼저 다른 미디어교육 기관 단체들과 비교해 특히 영상 제작 교육에 특화해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프리미어나 애프터이펙트, 포토샵 등 편집과 카메라 사용법 및 촬영 교육, 다큐, 라디오 제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확장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및 편집 교육과 유튜브 제작, 1인 크리에이터 과정, 팟캐스터, 드론 교육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강좌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을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희망 지역이나 기관에 마을 미디어 제작 교육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영상과 라디오 등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을 미디어교육은 2017년 21곳, 2018년 50곳, 2019년 70곳, 그리고 2020년에는 80곳으로 확대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21a, 2021b). 지원을 통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마을 미디어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다

방통위는 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마찬가지로 학교 자유학기(년)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광고 및 영화, 영상 제작 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최근 들어 팩트체크 등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15개 안팎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학교나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수업도 많이 있어 실제 더 많은 학교나 기관에서 자유학기(년)제에 따른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유학기제와 동아리 등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참여 학교가 2017년 299개교에서 2018년 333개교, 2019년 362개교, 그리고 2020년에는 400개교로 늘어났다(방송통신위원회, 2021a).

이와 함께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체험은

뉴스 제작이나 라디오 제작, 스마트폰 영상 제작 등 희망 수강자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일정 시간 동안 미디어교육 체험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로 찾아가거나 센터에서 하는 상설교육처럼 긴 차시를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지만, 리터러시부터 기획, 기사나 대본 작성, 스튜디오 녹화, 영상 제작까지 체험을 마치면 결과물까지 완성하는 축약적인 미디어교육이다. 유치원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성인과 장애인 등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최근 리터러시(팩트체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에는 영상 제작 등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터러시 영역을 확대하면서 최근 1~2년 사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에 의한 전국민 대상 팩트체크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 교육 대상으로는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 일반 성인 등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표 II-5>에서 보는 것처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 팩트체크 교육 대상별 주요 교육 내용

연번	대상	주요 교육 내용
1	청소년	정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미디어 이용 습관, 허위정보의 피해사례,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2	성인	팩트체크와 저널리즘의 가치, 허위정보 특징 분석, 팩트체크 원칙 및 가이드라인,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3	노인	뉴스의 게이트키퍼, 확증편향 등 역기능 이해, 정보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근거, 출처, 정보원 등)
4	교사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사례, 교육과정과 연계된 팩트체크 교육과정, 팩트체크 가이드라인, 팩트체크 교육 교수법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21c). 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p.94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의 일환으로 민간 자원의 팩트체크 활성화

화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검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방지에 도움을 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2020년 11월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그림 II-4 참조). 방통위는 이런 사업 등을 통해 팩트체크 활동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팩트체크 공모전도 벌이고 있다.



* 출처: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https://factchecker.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그림 II-4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홈페이지

〈표 II-6〉에서 알 수 있듯이, 방통위의 미디어교육의 주요 사업 분야는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구축,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 기준 총 10개의 지역 센터를 거점으로 미디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작 실습,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제고 등 상설 미디어교육 참가 인원이 2020년 11월 기준으로 31만 명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1b).

표 II-6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사업 분야	주요 내용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체계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 유아, 청소년, 노인 등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구축 및 운영으로 미디어 소외지역의 격차 해소 노력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역기능 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1인 미디어, VR, 드론 등 뉴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미디어교육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실태 및 수요 조사, 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연구조사 및 인력 양성

방통위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운영을 보면,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주로 매년 1월에 미디어교육 강사를 선발해 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교육 분야를 보면, 기존에 주로 해오던 영상과 라디오, 스마트, 기타 분야 외에 최근에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비평과 분석 영역을 추가해 일반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표 II-7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 모집 공고 내용

o 일반강사 교육 분야 (전문 교육 분야 3개 선택)

분야	비평&분석	영상	라디오	스마트	기타
교육 가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 분석 ■ 온라인 미디어 ■ 저작권 ■ 미디어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구성 ■ 촬영 ■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구성 ■ 녹음/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활용 ■ 유튜브 ■ 드론 ■ VR/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치(발성) ■ 영상 송출 (온라인 중계) ■ 사진

기존에도 상설교육 프로그램에 비평 수업이 있었지만, 제작 교육만큼 종류가 많거나 자주 있지는 않고 특정 강사가 맡아 진행해 왔는데, 최근 이와 별개로 팩트체크팀을 신설해 뉴스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 처음 팩트체크와 관련한 강사를 선발해 연수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강사를 보강하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미디어교육은 산하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들의 운영 방식은 재단의 직접 수행과 업무용역 또는 외부 위탁, 민간경상보조, 공모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사업을 크게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영역으로 구분지어 사업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의 주요 사업 분야와 내용 등을 요약해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분야 및 주요 내용

사업 분야	주요 내용	담당
학교 미디어교육 (미디어운영학교/ 자유학기제 학교)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강사 파견, 교사 및 미디어 강사 연수,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개최, 종이신문 제공, e-NIE 계정 제공	미디어교육팀 (직접 수행 및 업 무용역 또는 외부 위탁 방식)
사회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및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실 기관에 강사 파견, 미디어교육원 운영, 미디어교육 진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개최, 청소년 체커톤 대회 개최, 교사 대상 선진 미디어교육 답사,	미디어교육팀 (민간경상보조, 공모, 또는 직접 수행 방식)

사업 분야	주요 내용	담당
	미디어교육 시설·단체 지원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언론인 초빙교수 운영, 미디어교육 관련 간행물 발간	
e-NIE 프로그램 보급	미디어교육 대상 학교에 계정 무료제공, 전국 교육청 통해 계정활용 학교 발굴 및 강의지원	뉴스저작권팀 (직접 운영 방식)
미디어교육 포털사이트 (www.forme.or.kr) 운영	e-NIE 튜터 운영 (교사용, 학부모용, 정보소외계층용), e-NIE 온라인 수업지도안 제공,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 제공	미디어교육팀 (직접 운영 방식)
기타	지역신문 제안사업에 기금 지원 (지역신문사 주최 청소년 기자체험교육, 학교신문 만들기 교육 등)	지역신문발전위 원회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분별 있고 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인재 핵심 역량 가운데 특히 ‘정보처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 강사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역량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교수 능력 향상 등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은 대부분 해당 학교가 매년 1~2월 재단의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시에 신청 후 선정되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미디어 운영학교 지원(연 24시간 강의)과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년)제 미디어교육 사업 지원(연 34시간 강의)으로 나누어진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 중, 고교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한 고품질 수업을 지원(연 24시간)하고, 교사가 수업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수업지도안 등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또 수업용 신문과 온라인 뉴스활용교육 프로그램(e-NIE)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지원이 있다.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등 자유학기제 자율활동 맞춤형 교재와 수업지도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파견을 통한 수업(연 34시간)도 지원한다. 여기서도 수업용 신문 지원과 온라인 뉴스활용교육 프로그램(e-NIE)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에 제공되는 수업용 신문은 지역신문이다. 2021년 이 사업 대상 학교에서 서울 지역 중학교가 제외되었는데, 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이 서울 지역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신문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도 학교미디어교육의 주요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수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실습과 피드백 중심의 집합식 특수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같은 집합식 연수는 서울 미디어교육팀 외에 전국 4개 지사(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예산을 내려주어 연 1~2회 정도 운영되어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0년 5월 미디어교육원을 개관했는데, 2021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원연수를 위한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 관련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지는 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제약 없는 온라인 원격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교사 연수도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방법이 아니라 각 지사에서 예산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현장 교사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연구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모델과 교재, 지도안 등에 대한 연구모임 형태의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사와 장학사, 학자, 언론인, 미디어교육 강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미디어교육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점

이나 보완점을 발굴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사들만으로 이뤄진 연구회를 지원했는데, 최근 들어 미디어교육을 하는 교사와 재단의 미디어 강사, 학자, 장학사, 교육 연구사, 언론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3~4인씩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35개 공동체를 선정해 공동체당 45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미디어교육 지원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미디어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과 성인, 노년층과 학부모,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 단계에 맞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복지를 향상하고 평등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미디어교육도 대부분 해당 기관이 매년 1~2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야 가능하다.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평생 교실 기관에서 연 20시간 강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 미디어교육과 달리 수업용 신문이나 e-NIE 계정은 제공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이나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교육 희망 기관 요구에 맞춘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지원(연 20시간 강사파견)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별에 맞춰 교재와 지도안 등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교육 시설과 단체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역량 있는 시설과 단체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돕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정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을 시행 중인 비영리 민간 교육시설 및 단체에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나 소속 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또 다양한 뉴스 읽기 확산과 뉴스 리터러시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의 강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교육 진흥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분별 있는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뉴스 읽기 및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SNS 운영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뉴스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홍보 영상물 제작도 돕고 있다.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뉴스콘텐츠를 취재하고 제작하는 일일 기자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NIE 캠프나 NIE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15개 신문사가 선정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는데, 먼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문 강사풀제를 운영하면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현장에 이들을 파견하고 있다. 신규 강사의 경우 서류전형과 함께 120시간 교육과정 이수 과정을 거쳐 수업 PT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해 양성하고 있다. 경력 강사는 서류전형과 수업 PT 및 면접 전형, 60시간 교육과정 이수의 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강사풀에 등록된 모든 강사는 매년 1~2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강사 선발이 정기적이지 않고 자유학기제 등 교육 인력 수요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선발한 강사풀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현재 재단에서는 교육 인력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 대신 각 지역 강사들로 하여금 협동조합 등 강사법인을 권역별로 구성해(현재 서울 4개, 영남권 1개, 충청·전라권 1개 등 모두 6개) 전체 예산을 내려주고 해당 조합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업과 프로그램 등을 배정해 교육을 진행하는 위탁 운용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연령대와 계층,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나 사회교육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 미디어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단 홈페이지와 별도로 미디어교육 통합지원사이트 '포미(www.forme.or.kr)'를 운영하고 있다. 포미 사이트는 재단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한 다양한 공지나 보도자료 업데이트 같은 기본 역할과 함께, e-NIE 수업지도안 제공, 미디어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과 제공,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역할도 수행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II-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통합지원사이트 '포미' 홈페이지

이와 함께 매년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를 개최해 미디어교육 우수 수업 사례와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

교사와 전문 강사 등 미디어교육 관계자 300~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행사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선진 미디어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주로 미디어 교육을 3년 이상 수행해 온 학교 교사들 가운데 선발을 통해 해외 미디어교육 선진국(호주, 핀란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견학과 현장 답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koreapressfoundation>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그림 11-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4. 시사점

〈표 II-9〉는 앞서 살핀 문체부, 방통위, 교육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부처별 비교우위 및 장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9 주요 부처별 미디어교육의 비교우위 및 장점

부처	비교우위 및 장점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산하기관과 지역 미디어센터 등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텍스트)와 관련된 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A-미디어 교육기관 담당자) - 문체부가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부처라는 점에서 영상, 게임, 뉴스 등의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B-교수) - 미디어교육 심층조사 및 연구, 교사 등 미디어교육 매개자 대상 심층교육, 연수기능을 보유. (C-교수) - 청소년이나 일반인 대상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D-교수)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 진흥이라는 재단 미션에 적합한 교육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교수)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10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여러 계층을 상대로 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지역기반 교육 자원을 갖추고 있어 지역 기반 교육의 접점이 넓은 것이 장점이며 미디어 기술 관련한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10여개 지역에 구축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간 확보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강사진을 가지고 있음. (B-교수) - 전국단위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립(지속적 확산), 자유학기제 등 일선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및 강사풀 보유. (C-교수) -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심 전국 미디어센터 관리 및 사업추진. 모든 이용자 대상 접근가능한 시설과 제작교육 인프라 갖춤. (C-교수) - 타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장애인 대상의 미디어교육(주로 영상 제작)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D-교수) -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음. (D-교수)

부처	비교우위 및 장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로 풀어나가고 있는 동향을 보임.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개별 교사와 학교의 노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 맥락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음.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학교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사업과 예산이 설계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 등을 지원,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현장에 보급 및 실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실행 및 지원의 강점을 보임. (B-교수) - 학교 미디어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주체임. (C-교수) -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양시킬 수 있도록 주요 교과서(국어, 사회 등)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D-교수) - 학교 미디어 교육 포털 '미리네' 운영, 관련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 탑재 등을 최근의 성과로 볼 수 있음. (E-교수)

부처별 비교우위 및 장점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처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단점에 대해서 본 연구의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표 II-10>에 정리하였다.

표 II-10 주요 부처별 미디어교육의 개선사항 및 단점

부처	개선사항 및 단점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 및 영화교육 등을 진행해 온 노하우가 있으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실행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실행계획의 단위들이 다르며, 이를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지 않음. (B-교수) - 개별 기관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통합된 방향성을 갖고 수행되기 보다는 정책사업, 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음. (B-교수)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에 지역 미디어교육의 기반시설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초기 설립이후 자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B-교수)

부처	개선사항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진흥재단의 본래기능(NIE, 언론인지원 등)과 미디어교육 간의 경계불분명, 문체부만의 특화된 미디어교육 역할이 불분명. (C-교수) - 미디어 소외계층(예.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D-교수) - 미디어 리터러시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 중심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교육이 갖는 한계가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를 뉴스 중심으로 제한하는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E-교수)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퍼블릭액세스 기반으로 출발하여 그간 영상제작중심의 미디어교육을 수행해 왔음. 미디어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방통위만의 비전, 개념 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B-교수) - 시설중심의 한계, 강사풀은 많으나 체계적 양성제도 미비, 하드웨어 인프라에 예산집중으로 인해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강사 등) 예산투자 미흡. (C-교수) - 영상 제작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때문에, '제작 능력'은 고양시킬 수 있으나 '비판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D-교수) - 방통위는 규제 기관이므로 미디어 교육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신장을 위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에 보다 힘을 실을 필요가 있음. (E-교수)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기관인데, 최근 팩트체크에 지나치게 힘을 쏟고 있음. 이는 문화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E-교수)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제작 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데 제작 교육 자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본령이 아니며, 제작 경험을 통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배제, 관점의 반영, 재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E-교수)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화, 위계화된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적 미디어 교육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음.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학습자 입장에서 지속적,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 및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의 방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교육부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디어리터러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가이드, 그리고 정책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상태에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실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B-교수)

부처	개선사항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미디어교육에 대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보며 따라서 전담부서, 인력 등이 아직 미비. 여러 산하기관에서 정책연구, 교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된 로드맵이 부재함. (C-교수) - 제도권 교육 내의 대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학교 내에서도 미디어 소외계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D-교수)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함. (E-교수) -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부도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E-교수) - 학교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에 3개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학교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애초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필요함. (E-교수)

미디어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언론진흥재단은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권익 및 시청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그동안 신문법에 근거하여 미디어와 뉴스의 이해, 활용, 제작, 책임과 윤리 등을 미디어교육의 기본 틀로 갖고 있는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영상과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구체적인 교육의 기본 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오프라인 신문의 진흥을 위한 방편으로 뉴스활용교육(NIE)을 시작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해 사업의 영역을 넓혔으나 전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청자미디어재단도 기존의 10개 지역 센터들이 초·중·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디어 소외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 미디어교육 허브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한 측면은 있으나, 영상제작 중심의 프로그램에 치중하면서, ‘비판·분석’ 등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 부처에 비해 미디어교육의 후발주자로서 부족한 인프라 및 인력의 보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학교미디어교육의 정책방향 및 로드맵 설정, 교사 및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 등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11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항목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미션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에 기여	시청자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비전	저널리즘 가치실현 전문기관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전문기관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연도	2009	2015
근거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설치 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 진흥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도 교육청 간 편차가 크며, 이 같은 현상은 일선 학교 및 교사들 간에도 쉽사리 목격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의 미디어교육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문체부 내 산하기관들이 영화, 뉴스, 인터넷 등 매체 종류별 특정 영역의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처 내 산하기관 간의 연계나 체계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센터들 역시 지역 센터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제3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체계 해외 동향

- 1. EU
- 2. 핀란드
- 3. 영국
- 4. 미국
- 5. 호주
- 6. 시사점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체계 해외 동향

통상 주요 국가들의 경우 미디어교육에 관한 개별 법제를 구성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정책적 선언 및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법안 제정을 통해 선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이 법체계적 또는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정부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천명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를 제정 및 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가들의 미디어교육 정책의 추진체계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간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입각하여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EU

1) 추진체계 및 기능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및 민간협력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유럽시청각연구소(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조사들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교육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통적인 채널부터 소셜 미디어까지 다양한 채널의 다양한 미디어와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에 주목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급속히 퍼지는 허위조작정보의 영향에 주목하면서 미디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맥락을 포괄하여, 2018년 11월 14일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지침 33(a)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하고 진작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2022년 12월 19일까지(그리고 그 후로 매3년 마다) 회원국별로 관련 사항에 관해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침 28(b)에 의하면, 비디오 공유 플랫폼, 즉 민간사업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한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 이용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영상 제공 사업자와 각국의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매체와 채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차원의 미디어 정책은 역내 회원국들의 미디어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진흥과 규제, 사회·경제·문화적 논의나 관련 대응방향

등은 각 회원국의 국내 미디어 환경과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 정책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11월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EU회원국이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을 위한 촉진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조치와 도구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립시청각위원회가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하고 또한 국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발 대책을 EU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2) 다층적 연구활동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그룹’(European Commission Media Literacy Expert Group),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인터넷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Safer Internet for Children)은 개별 국가 및 유럽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캠페인을 연구 기반으로 개발하고 시행한다. 유럽 미디어 규제기관 협력 기구인 EPRA도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미디어 교육 관련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를 각국 대표 기관과 공유하고 교류한다. 핀란드에서는 국립시청각연구소가 유럽연합 단위 논의에 대표 기관으로 협력하고, 여러 대학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관련 연구에 참여한다.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연구 조사 EU 키즈 온라인(EU Kids Online)은 핀란드의 아동·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미디어 환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원하는 이 다국적 연구조사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현황과 함께 위험 및 안전 요소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9-16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혹은 가정에서 각국 현황에 맞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정보나 메시지에 노출될 위험성, 낯선 사람과의 대화 경험,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 개인정보 남용에 관한 인식 등을 포함한다. 이 조사는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접하는 위험과 기회(risks and opportunities) 요소를 정리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각국 미디어 규제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김아미, 2009).

이러한 조사 결과는 EU 및 회원국이 인터넷·미디어 정책을 평가하고 실태를 반영하는 데도 사용된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2010년과 2020년 EU 키즈 온라인 핀란드 조사를 이끈 탐페레 대학(Tampere University) 시르쿠 꼬띠라이넨(Sirkku Kotilainen) 교수는 어린이 절반 가량이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과거에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점인 혐오발언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정현선 외, 2020). 또한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방문하는지를 부모가 일상에서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핀란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20%가량만 부모나 보호자와 인터넷 안전에 관해 논의했고, 이 가운데 7% 미만이 부모로부터 조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2017-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EU 키즈 온라인 2020에는⁵⁾ 19개국 어린이 2만 5천 명이 참여했다. 참여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몇 주요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Smahel et al. 2020).

- 전 유럽의 대다수 어린이에게 이제 스마트폰은 가장 널리 쓰이는 온라인 접속 경로다. 이 말은 ‘어디에서든, 언제든’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많은

4) 월레(Yle) 뉴스.

https://yle.fi/uutiset/osasto/news/nearly_half_of_kids_in_finland_face_harassment_online/10798767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5) EU 키즈 온라인(EU Kids Online) 2020 국제 보고서.

<https://www.lse.ac.uk/media-and-communications/assets/documents/research/eu-kids-online/reports/EU-Kids-Online-2020-10Feb2020.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어린이는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매일 혹은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 2010년 조사와 비교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 및 인터넷 사용량은 상당히 증가했다. 어린이가 매일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은 많은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또 대다수 국가에서 14-16세 응답자는 9-10세 어린이보다 거의 두 배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튜브의 인기와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확산으로 아이들의 온라인 경험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
- 인터넷상에서 불편하거나 화가 나는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대다수 어린이는 부모나 친구 혹은 양쪽 모두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런 일을 돕는 전문가 혹은 선생님에게 말했다는 경우는 드물었다(정현선 외, 2020).

2) 특징적 교육지원 체계

(1)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및 미디어리터러시 상

집행위원회는 매년 ‘유럽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European Media Literacy Week)’을 개최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 행사는 EU 회원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규제 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은 번갈아 행사를 주최하고, 고위급 회담을 비롯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적이면서도 혁신성과 잠재력이 큰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상(Media Literacy Awards)을 수여함으로써 미디어리터러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2) 비영리 민간조직 등의 교육지원 활동

‘EU 시청자권익위원회(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EAVI)’⁶⁾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과 시민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하고 (읽기와 쓰기 등) 미디어를 통해 공공의 삶에 참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럽 역내 국가들의 경우 시민권을 활발히 행사하는 것에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느낄 때 건강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미디어 이용의 모범사례를 개발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유럽의 정책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완전한 시민권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주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영상 및 책자 등을 발간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럽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2. 핀란드

1) 추진체계 및 근거

(1)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19년 12월 16일에 개정된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⁷⁾을 발표하였다.⁸⁾ 이는 과거 2013년에 발표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6) EAVI(MEDIA LITERACY for CITIZENSHIP). <https://eavi.eu/>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7)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EDIA LITERACY IN FINLAND: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https://medialukutaitosuomessa.fi/mediaeducationpolicy.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위한 문화 정책 지침(Cultural policy Guidelines)」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정책 혁신의 결과물이다. 과거 지침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와 달리 2019년 지침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은 성인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룹 등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였다.⁹⁾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화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은 연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주제 중심의 연관되고 목표 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제적인 공조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그룹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지식과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리터러시가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핀란드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은 ‘미디어교육 및 시청각미디어부’(Department for Media Education and Audiovisual Media: MEKU)¹⁰⁾가 담당하고 있다. MEKU는 미디어 교육 문화를 촉진하고, 교수법을 개발하며, 미디어 교육 실행 및 모델을 개발한다. 전국의 지역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 미디어 교육의 중심으로서 조정자

8) NORDICOM. 「Finland's national policy for media education updated」. <https://www.nordicom.gu.se/en/latest/news/finlands-national-policy-media-education-updated>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9)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EDIA LITERACY IN FINLAND: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https://medialukutaitosuomessa.fi/en/>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10) KAVI. <https://kavi.fi/en/media-education/>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의 기능을 한다. 핀란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디어 교육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경험 축적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2012년에 교육문화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시청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KAVI)는 핀란드의 시청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동시에 미디어 교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2) 교육과정의 생애주기적 접근

교육문화부가 핀란드의 일반적인 교육 정책의 전반을 감독하고 입법 및 정책을 수행한다면, 핀란드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교육 개발 및 교육 정책을 실행한다. 즉 핀란드 교육청은 영유아 및 중등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등 공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데, 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문학, 시각 예술, 사회, 역사, 건강 교육 등 다양한 과목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멀티리터러시의 부분으로 이해되는 다분야 학습 모듈의 프레임워크로 발전된다. 기본 교육을 위한 핵심 커리큘럼(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은 분석적, 비판적, 윤리적, 환경적, 문화적 리터러시를 연습하고, 커뮤니티, 미디어, 사회에 참여할 때 정보를 생산, 해석, 소통하고 멀티 리터러시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일반적 상위 교육을 위한 핵심 커리큘럼(National core curriculum for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은 저작권, 언론의 자유, 콘텐츠 생산, 이용, 공유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 규범을 강조한다. 온라인 안전 및 중독의 위험성 등이 건강 관련 핵심 커리큘럼의 세부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법, 학습 도구, 훈련 등은 대학 및 교육 기관과 NGO 등을 통해 지원되며,

교육문화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정현선 외, 2020).

(3) 국정과제로서의 설정

2020년 현재 핀란드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 내각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법치주의 위에 만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핀란드’(safe and secure Finland built on the rule of law)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¹¹⁾ 국정과제는 교원양성, 학교 교육, 청소년 활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계발 필요성을 명시한다. 여기서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전파를 막는 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급하지만, 실제 핀란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교육 논의와 실천은 더 넓은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는 핀란드 교육문화부 산하 국립시청각연구소(KAVI, The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에서 제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¹²⁾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개인·사회·직업적으로 미디어화(미디어에 중재된, mediated)한 상태로, 형식적이고 또 비형식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로) 분석(analyse), 제작(create), 소통(communicate), 느끼고(feel), 접근(access), 평가(evaluate), 참여(participate), 협업(collaborate)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ies)를 기른다.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좋은 삶(Good life), 평화(Peace), 민주주의(Democracy), 경제(Economy)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정현선 외, 2020).

11) 산나 마린(Sanna Marin) 내각 국정과제 전문.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161935/VN_2019_33.pdf?sequence=1&isAllowed=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12) 핀란드 국립시청각연구소 자료 “왜 미디어교육인가(Why Media Education)?”.

https://kavi.fi/sites/default/files/documents/whymediaeducation_esite.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4) 국가 교육과정 반영 및 민간 협력적 교육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이 시민 기본권 및 직업선택 과정에서 중요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많은 정책에 반영된다. 2016년 국가교육과정안(OPS 2016)에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와 ICT 활용능력(ICT skills)을 핵심 역량으로 명시한 변화나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에 따른 문해력 증진 정책과 캠페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활발한 미디어 활용과 참여는 청소년 문화에 기여하는 한편, 사이버 안전 및 과이용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혐오발언 및 사이버폭력 대응 정책이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허위정보 대응 정책이 대표적이다(Mäkinen, 2019). 다만, 미디어의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보호주의적 시각의 정책과 함께 교육적 효과, 문화 다양성 유지, 불평등 해소, 표현의 자유 등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교육문화부는 국립시청각연구소(KAVI)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을 운영하고, 자체 운영하는 교육·연구 자료실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Media Literacy School)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사 및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 산하 미디어 교육 정책 수행 기관인 국립시청각연구소는 대학과 연구소, 도서관 및 게임회사 네트워크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해 게임주간(Peliviikko)¹³⁾를 기획하고, 게임교육 핸드북을 내놓기도 한다. 이는 아동 청소년과 이들의 교사, 강사, 부모, 보호자까지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는 사회·문화·교육·산업 캠페인이다(정현선 외, 2020).

13) 핀란드 게임주간 펠리비코(Game Week). <https://www.peliviikko.fi/>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 특징적 교육지원 체계

(1) 민관협력 체계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관련된 정부부처, 기관, 학교,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즉 모든 국민의 미디어 교육을 완전히 담당할 하나의 기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하되 대부분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실행 단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 돌봄,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들과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관련 분야의 민간 분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디어 분야, 기업, 협회 및 다양한 조직들도 참여한다. 대학, 교육 기관, 재단 등 학계의 지원도 포함된다.

(2) 최신 이슈 반영

최근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데이터화(datafication), 알고리즘(algorithms), 증강·가상현실(augmented virtual reality), 로봇자동화(robotisation) 등 기술의 발전과 움직이는 이미지, 스피치 인식, 다중센서 테크닉, 정보 유포, 이미지 및 영상 조작 등 미래의 미디어와 관련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단순히 미디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적·사회적·공감적 능력과 윤리 및 도덕과 저작권 등 관련 기술 등으로 확대하여 본다. 자신과 남을 대하는 방식, 미디어의 의도와 관련 지식을 알고 평가하는 능력이나 디지털 사회의 온라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와 그루밍 등 안전 문제도 다루고 있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교육과 주제 및 교육 방식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정현선 외, 2020).

3. 영국

1) 추진체계 및 근거

(1) 방송통신 규제기관 중심의 정책 추진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1990년대 후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 의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이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에 따라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오프콤)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즉 Ofcom은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의 의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The Communication Act 2003 제11조

- ① 오프콤은 다음을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혹은 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정 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a) 전파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하여 대중들이 더 나은 이해를 하고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장려한다.
 - (b)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선택되거나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내용들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대중들이 더 나은 인식과 이해를 하게하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장려한다.
 - (c) 전파 미디어를 수단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접근은 규제되거나 규제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더 나은 인식 향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장려토록 한다.
 - (d) 그와 같은 내용을 이용하는 개인이, 자신이 수신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음에 기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더 나은 인식 향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장려토록 한다.
 - (e)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그리고 수신된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시스템 두 가지 모두 효율적이며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고 이용되도록 장려한다.

② 본 항에서 어떠한 것이든 전파 미디어를 수단으로 하여 전달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a) 공공의 구성원 혹은 한 계층에 의해 수신 가능하도록 방송되는 것, 혹은
- (b)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공공의 구성원 혹은 한 계층에게 배급되는 것

이에 따라 법 제정 이후인 2003년부터 오프콤은 영국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과 연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교육을 책임지게 되었다. 오프콤에서는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한 형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프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상황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사용, 이해 및 생성하는 능력’이라 규정하였다¹⁴⁾.

Ofcom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련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인식해야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Ofcom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법」 제14조 (6)항 (a)호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14) Ofcom.

<https://www.ofcom.org.uk/research-and-data/media-literacy-research/media-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 다수의 정부부처 참여

실무적 차원에서는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에는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앞에서 설명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와 Ofcom 외에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내무성(Home Office) 등이 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미디어와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 관련 이슈를, ‘Ofcom’은 전자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와 이용을, 내무성은 사이버 안보와 테러리즘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 및 교과 과정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2017년 3월에는 ‘영국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을, 10월에는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인터넷 안전 전략 녹색서(Internet Safety Strategy green paper)’를 발간하였다.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국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서관을 이용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컴퓨팅 교과과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중요시하면서 정부는 산업계,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등의 조직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어린이 성착취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수의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설치한 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는 영국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사이버 괴롭힘 등 온라인 피해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9년 4월에는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통해 온라인 피해 및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공표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교과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공교육은 2014년에 도입된 국가 교육 과정인 ‘컴퓨팅(computing)’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 과목은 5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을 책임 있고, 자신감 있으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세부터는 온라인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와 기술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방법, 그리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 등을 배운다. 14세부터는 더 정교화 된 고급 과정을 수강하며, 새로운 기술을 식별하고 기술의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국의 중등 교육에서는 미디어 선택 과정을, 고등 교육에서는 미디어 및 영화 선택 과정을 제공하며,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도 한다.

2) 특징적 교육지원 체계

(1) 학교 및 교사 교육과 연계된 민간지원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부부처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사회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영화위원회(UK Film Council)와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는 ‘움직이는 이미지(moving image)’ 교육을 지원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였다.¹⁵⁾ 영화에 대한 해석과 적용, 영화 촬영과 관련한 기술 및 미디어 산업 전반, 영화 불법 복제 관련 등 단순히 신문이나 방송 매체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전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접근하였다. 영화위원회는 ‘21세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고위급 회의와 컨퍼런스, 프로젝트, 조직간 협력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15) Richard Wallis & David Buckingham (2019) Media literacy: the UK's undead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5:2, 188-20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286632.2016.1229314>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증진을 주장하였다. 교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학습 도구 및 자료는 영국 안전한 인터넷센터(UK Safer Internet Center)와 협력하는 SWGFL(South West Grid for Learning), 국제어린이넷(Childnet International),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컴퓨터사이언스 교사네트워크(Network of Teaching Excellence in Computer Science)는 정부의 재정으로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해하도록 돕는다.¹⁶⁾

(2) 디지털 안전의 강조

영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 초점을 맞춘 이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의 괴롭힘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며, 디지털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한 것이다. 헬프라인 및 핫라인을 이용해 온라인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얻도록 하고, 매년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을 개최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디지털 기술사용을 장려한다.

4. 미국

1) 추진체계 및 근거

(1)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 법제화 시도

미국의 경우에는 명확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입법정책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에이미 클로부처(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위원은 2019년에 「디지털

16) European Commission. Media literacy and safe use of new media(United Kingd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68-media-literacy-and-safe-use-new-media-united-kingdom-england>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법안(The Digital Citizenship and Media Literacy Act)'을 발의했다¹⁷⁾. 이 법이 통과되면 2,000만 달러의 예산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할당되게 된다. 이 예산은 각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과목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개발하거나 기존 과목에 포함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며,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도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비용을 기술하여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통해 예산 배정이 결정된다. 예산 일부는 주 교육 의회로 전달되며, 각 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주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 관련 비영리 교육 기관 뿐 아니라 장애 학생 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교사, 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학부모 단체, 교육 행정가, 학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의 교육기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예산이 넉넉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다양한 인종의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주별 정책 추진

국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이 없는 미국에서는 주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학군(local school districts)에서 방향성을 잡고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하여 교육 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Media Literacy Now, 2020). 연방 정부는 교육 정책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역할이 미미하며, 학부모 단체(Parent Advocacy Groups)가 지역 학군과 주 정부의 미디어 교육 정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현선 외, 2020).

17) Congress.Gov S.2240 – Digital Citizenship and Media Literacy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240/text>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미국 각 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법안을 검토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14개 주¹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고, 현재 관련된 법안을 추진 중인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14개 주 중에 가장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 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는 교육부가 전 학년의 모든 과목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기준을 정해놓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언어 예술(language art)’ 과목에 국한되어 있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2013년 전 과목의 교육 목표로 확대되었다. 플로리다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목의 교육 표준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읽고 쓰는 능력, 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시민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오하이오 역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의 교육 표준에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strong leader’로 평가받는 텍사스에서는 2019년 통과한 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학군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수업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모든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창작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포함한, 상황에 맞고 책임감 있는 건강한 온라인 행동의 표준’을 뜻한다(Media Literacy Now, 2020).

워싱턴 주에서는 2015년도에 학교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확장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온라인 자료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워싱턴 주는 2016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인 ‘Media Literacy, Digital

18) 14개 주 중 법안을 바탕으로 Advanced Leader (Florida, Ohio), Strong Leader (Texas), Progressing Leader (New Mexico, Washington), Emerging Leader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Illinois, Massachusetts, Minnesota, New Jersey, Rhode Island, Utah)로 구분했다 (Media Literacy Now, 2020).

Citizenship and Internet Safety Model Bill'(2016)을 제정했고, 교육청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회의 조언을 받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우수사례와 추천 교육법을 개발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이사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배포하는 포털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했으며, 2019년에는 교사 연수를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뉴멕시코 주 역시 의회와 상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동의하여 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켰다. 현재 다른 주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범교과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과 교사 연수에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이다(Media Literacy Now, 2020).

2) 특징적 교육지원 체계

(1)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통한 E-Rate 프로그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은 통신 보조금 및 수수료와 관련된 기금의 사용을 일컫는다. 이는 통신법(1996)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된 기금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이들이 공평한 디지털 접근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서 운용하는 네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교 및 도서관 정보통신 지원기금 프로그램(The Schools and Libraries Program of the Universal Service Fund)'은 'E-Rate' 프로그램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기금은 공립 및 비영리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공공 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 재정이 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학교 도서관에 하드웨어 기기 구입, 인터넷 접속, 통신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Mendoza, 2020;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 2019)¹⁹⁾

자금의 사용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범주(범주1)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에 관한 자금으로, 인터넷 접속과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범주(범주2)는 '내부 연결 (Internal Connections, IC), 관리형 내부 광대역 서비스(Managed Internal Broadband Services, MIBS), 기본 내부 연결 유지 관리(Basic Maintenance of Internal Connections, BMIC)'에 관한 자금이다. 이는 학교 및 도서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대역 연결 (Broadband Connectivity)을 도입하고,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기본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 범주(범주3)는 위의 두 범주에 필요한 초기 구성자금, 수수료, 요금 등을 후원한다.

각 범주에 따라 기금 지원의 자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범주1의 경우, 해당 학교의 무료 급식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에 영향을 받으며, 범주2의 경우, 학교와 도서관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FCC는 이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학교의 재정 상황과 도시, 농촌 등 위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의 20~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Mendoza, 2020;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 2019).

연간 예산은 2019년 기준 41억 5천만불(약 4조 1500억)이었으며, 2005년 이후 10만 곳이 넘는 학교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 기금으로 인해 1994년 3%였던 교실 및 학교 인터넷 접속률이, 1999년의 교실 접속률 63%, 학교 접속률 95%까지 올랐다(Stedman & Osorio-O'Dea, 2001). 2005년도에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에 의해 실행된 연구에 따르면, 'E-rate program'은 학생들의 시험점수, 졸업 비율, 대학 입학 비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 2006).

19)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 School and Library Eligibility.

<https://www.usac.org/e-rate/applicant-process/before-you-begin/school-and-library-eligibilit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 교사단체의 적극적 활동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교육과정 없이 미국에서는 멤버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사단체들이 교육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현선 외, 2020). 예를 들어 25,000명의 회원이 있는 영어교사협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는 1970년대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협회의 정책이 있고, 회원들은 그 정책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협회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정이용 규칙(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Media Literacy Education)²⁰⁾은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수업 시간에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안내할 뿐 아니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미디어 활용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영어교사가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3) 민간(기업)의 교육지원

미국의 분권화 되어 있고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의 특성으로 1960년대부터 기업들과 언론사들은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과 수업 자료 개발 등에 참여하며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대에는 기업에서 제작된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의 진정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에서 기업의 가입을 허용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었다. 찬성하는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기업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정부의 규제를 막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는 것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20)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CTE).

<https://ncte.org/statement/fairusemedia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미디어 리터러시 운동에서 미디어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우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친기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Hobbs, 2016).

많은 우려와 두려움이 표명되었지만, 기업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입은 획일적이지 않았고,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신문사, 방송국, 광고 업계, 인터넷 업계에서 제작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미디어 콘텐츠, 구조, 제작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창의적인 자기표현 및 활동 장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디어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미디어 산업의 문제점들과 도덕적인 문제들에 도전하도록 한다. 실제로 미디어 기업들이 주도한 여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하는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Hobbs, 2016).

르네 홉스 교수는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업들이 후원했거나 제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표로 정리했다(〈표 III-1〉 참고). 이 외에도 최근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작한 디지털 리터러시 커리큘럼과²¹⁾ 뉴욕타임즈²²⁾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르네 홉스 교수는 이에 대해 교사들이 기업이나 언론사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에서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들은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자료들은 결국 뉴욕타임즈를 좋아하게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기업들은 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들도 꾸준히 만들어 배포 해왔다. 비영리 단체인 ‘Creative Commons’²³⁾나 ‘Open Education Resources’²⁴⁾에서 제작된 자료들이 음반 협회나 영화협회에서 제작

21) Microsoft. <https://www.microsoft.com/en-us/digital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2)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section/learning/lesson-plans>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3) Creative Commons. <https://creativecommons.org/tag/lesson-plans/>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4) Open Education Resources. <https://www.edutopia.org/open-educational-resources-guide>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된 자료들과 어떻게 다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정현선 외, 2020).

표 III-1 기업의 후원으로 제작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제목	기관명	
Television in Today's World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1961
Visual Learning	Kodak	1969
Creating Critical Viewers	ABC Television	1991
Know TV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1961
Taking Charge of Your TV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1997
Assignment: Media Literacy	Discovery Channel	1998
Messages & Meanings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2001
Adobe Youth Voices	Adobe	2006
Media Smart UK	Advertising Industry	2007
News Literacy Project	ABC News, Associated Press, BuzzFeed and others	2008
Google Digital Literacy & Citizenship	Google	2011
Common Sense Media	Comcast, Cox and others	2011
Pivot: Eyes Wide Open	Participant Media	2013

* 출처 : Hobbs, R. (2016) Literacy: Understanding media and how they work. In R. G. Picard(Ed.), *What Society Needs from Media in the Age of Digital Communication*

5. 호주

1) 추진체계 및 근거

(1) 멜버른 선언 - 리터러시 역량 강조

2008년 「멜버른 선언」(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을 통해 호주 청소년 교육의 공통적인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는 리터러시를 주요한 핵심 영역으로 보고 학교에서 범교과적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멜버른 선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8개의 학습영역(국어, 수학, 과학, 인간과 사회과학, 예술, 기술, 건강과 체육, 언어), 7개의 핵심역량으로 이뤄졌다. 일곱 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리터러시(literacy)’이며, 국어(English) 및 예술(Art)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어과에서는 텍스트의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의 형식 및 구조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학습한다(정현선 외, 2015). 예술교과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대중 매체에 대한 예방 교육 차원에서 시작하였고, 온라인 상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확대되었다가, 2020년에는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디지털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2) 온라인 안전 향상법 등

호주는 각 주별로 자율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고등과정인 대학의 경우 미디어 교사 양성을 위한 과목을 제공하는 등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하고 명시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온라인 안전 관련 「온라인 안전 향상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등 온라인 안전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법률은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의 설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신고, 허가받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의 문제에 관하여 규정한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정보와 교육 자료 및 훈련을 부모와 학생 및 학교에 제공한다. 매년 2월에는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캠페인을 개최하여 책임 있고 긍정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용에 관하여 알리고 인식을 제고한다. 증거 기반의 연구와 어린이 및 청소년, 부모, 교육자, 여성, 노인 등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어린이 성착취물, 사이버 괴롭힘, 불법 이미지 촬영 등과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업자에게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호주 정보 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등과 협업한다.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투명하고, 신중하며, 공정한 법 집행과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온라인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온라인안전 전략 2019-2022(eSafety strategy 2019-2022)’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은 예방(Prevention), 협력(Partnerships), 홍보(Promotion), 프로그램(Programs), 보호(Protection), 사전적 변화(Proactive Change)를 중요시한다.²⁵⁾ 증거 기반의 연구와 지침을 통해 호주 국민들의 안전한 온라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예방을 도모한다. 비영리단체, 산업계, 학계, 교육자들, 정부 기관, 기타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중시한다. 온라인 안전 인식제고, 온라인 문제 신고 등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가 도달되도록 홍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전자우편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다. 가정 내 폭력을 겪은 여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낮은 노인 등 특히 온라인 유해에 취약한 집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며, 다양한 커뮤니티가 안전한 디지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온라인 유해물 신고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고, 호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과 불법

25)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Strategy Plan.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19-10/eSafety%20Strategy%20Plan.pdf>
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이미지 도용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전개되고 활용·오용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온라인 안전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3)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프레임워크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는 2020년 4월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프레임워크(Digital Literacy Skills Framework)’를 발표하였다.²⁶⁾ 호주 정부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개인의 목표와 교육, 훈련, 고용 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언어(language), 문해력(literacy), 수리(numeracy) 등의 영역과 함께 핵심적인 기술로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은 개인이 사회와 일(work)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5가지(학습, 읽기, 쓰기, 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리)에 이어 6번째 핵심 기술로 인정되었다.²⁷⁾

디지털 리터러시를 핵심 기술로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컴퓨터, 인터넷 또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인 포용(social inclusion)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프레임워크는 <4가지 수준(four levels of performance): Pre Level 1 Stage A and Stage B, Level 1, Level 2, Level 3>, <4가지 실행 변인: 지지(Support), 컨텍스트(Context), 텍스트 복잡성(Text complexity), 작업 복잡성(Task complexity)>,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개인과 커뮤니티(Personal

26)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igital Literacy Skills Framework」. <https://www.dese.gov.au/uncategorised/resources/digital-literacy-skills-framework>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7) Australian Core Skills Framework, Pre Level 1, 2017.

https://docs.employment.gov.au/system/files/doc/other/acsf_prelevel_1_2017.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and community), 일과 고용(Workplace and employment),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등 세 가지 도메인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광범위하고, 전문으로, 고도화된 텍스트와, 복잡한 과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특징적 교육지원 체계

(1) 미디어리터러시 연합의 적극적 활동

2020년 4월 발족한 호주 미디어리터러시 연합(Australian Media Literacy Alliance: AMLA)²⁸⁾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호주 국민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AMLA에는 호주 공영방송인 ABC, 호주 도서관 및 정보 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국립 영화 및 소리 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s), 호주 국립 및 주립 도서관(National and State Libraries Australia), 퀸즈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웨스턴 시드니 대학(Western Sydney University)이 참여하였다. AMLA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고품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투자,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 및 자원 개발, 국민들의 인식제고, 지역·주·연방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등을 강조한다.

28) Australian Media Literacy Alliance. www.medialiteracy.org.au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2) 공영방송의 역할

호주 공영방송인 ABC에는 호주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적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ABC는 2018년에 처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Australia's Media Literacy Week)을 개최한 바 있다. 도서관 및 정보협회는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료 보관소로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박물관은 호주의 정치적 유산 및 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통해 호주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및 소리 아카이브는 생생한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호주 미디어 문화에 깊게 연계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호주 국립 및 주립 도서관은 전자 출판물과 웹사이트를 포함한 호주 디지털 다큐멘터리 유산을 제공한다. 퀸즈랜드 공과대학의 디지털 미디어 연구 센터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담당하며,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문화 및 사회 연구소는 글로벌 변화 환경 속에서의 문화와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공영방송 ABC는 자사 홈페이지 내의 'Media Literacy'라는 웹사이트에서 뉴스 보도, 출처, 통계, 허위조작 정보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뉴스의 기초로 사실/의견/분석의 차이점, 뉴스보도와 조사 저널리즘, 의제설정, 자료 출처 확인, 편견에 대한 해석, 뉴스의 가치, 미디어 윤리, 공익저널리즘, 소셜미디어, 정치보도, 뉴스 해석, 좋은 미디어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최근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페이크 이미지 등 미디어에 대한 의심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들이 뉴스를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커리큘럼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2020년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은 지난 10월 26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는데, 미디어 활용 능력이 '가짜뉴스'보다 더 중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미디어 다이어트 등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리터러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 시사점

1) 부처간 소관 업무 법제상 명시를 전제로 한 협업체계 구축

대부분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부처 간의 연계를 근간으로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현대적인 미디어 활용은 일상생활 다방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건전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참여적 미디어 활용은 물론이고, 타인의 권리 및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가능성까지 다층적인 활용양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부처 간의 소관 업무 영역을 넘어, 각각의 부처 기능들이 상호 협력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는 일종의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협력의 강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통상 논해지는 미디어교육 주요 선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의원내각제적 통치(정부)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국가 정책 아젠더에 관한 부처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치적인 관행은 물론이고 내각 수상 및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입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이러한 추진체계는 다수의 부처들이 참여하는 합의제(위원회) 형태로 귀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이 다분히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 참여에 관한 부처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참여 부처(주체)

별로 명확한 소관 업무 및 정책에 관한 분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앞서 살펴본 주요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 핀란드, 호주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교과목 설정을 넘어서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을 다소 범교과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영역 및 논제들에 관한 자연스럽게 체화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미비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교육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민간 및 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기관)들의 보완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기관들의 미디어교육 지원은 대부분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보충하고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 협력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유아 및 성인에 대한 미디어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가지는 국가공동체적 의미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의 미디어교육은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과정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 법제의 입법에 있어서는 교육관련 소관 부처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타 민간영역의 교육기능들이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화를 도모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민간 협의체 지원

현대 사회에서의 미디어는 과거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인터넷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로 그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미디어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빠른 변화 양상과 속도를 가진다. 이에 더하여, 통상 최근의 미디어 기관 및 기업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기관 및 기업들의 다분히 공적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은 상업성의 그늘 밑에서 성장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의 교육 지원 및 협력은 이미 주요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사회 미디어 교육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의 측면에서 교강사들이 전문성 신장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 및 활용 역량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에 임하는 교강사들은 교강사들 스스로의 도움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앞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미디어 교육의 간접적 지원 방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교사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 모델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체는 또한 학교 밖 미디어교육 및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방안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견 및 활동이 국가적인 정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예산 지원방안의 명확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그러하지만, 지속성 있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성 및 효과성 있는 교육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물적 기반과 인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지속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최소 사항들만 남고, 참여적이고 건전한 시민을 육성한다는 미디어 교육의 종국적 취지는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이, 앞서 살펴본 바 있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및 이와 관련한 ‘E-Rate’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이 기금 자체가 교육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에 관한 기금 사용은 주로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또한 미디어교육과 주도적 연관성을 가지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들의 협력에 있어, 이러한 기금 조성 및 활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금과 당해 기금의 관리기관의 역할을 입법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4장 정책제언

- 1.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2. 학교 미디어 교육 정책
체계성 강화
- 3. 지역협의체 및 실천공동체
(CoP) 지원
- 4.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아카이브 구축
- 6. 지역격차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1.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2020년에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들어 부산, 전라남도, 광주, 서울 등 주요 시·도 의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앞다퉀 발의·공포하고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주요 지자체의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

조례명(공포일)	정의	주요내용
(경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0.7.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 연수 실시(위탁 가능) - 재정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1.1.6.)	(미디어교육)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학교미디어교육)	- 기본계획 수립·시행 -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 추진성과 평가 및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가능 - 협력체계 구축

조례명(공포일)	정의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 ('21.2.18.)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교원 교육 및 연수 실시(위탁 가능) -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활성화 사업 (연구·조사, 교재 개발·보급 등) - 협력체계 구축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2.26.)	(미디어교육)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참여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미디어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디어콘텐츠를 직접 제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제작 활동 지원 - 미디어교육협의회 구성 - 위탁 및 재정지원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3.25.)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	- 기본계획 수립·시행 -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 교원 연수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제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1.5.2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가

* 출처: 교육부(2021). 전국 시도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 협의회 내부자료. p.14

이처럼 지자체가 경쟁하듯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여섯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표 IV-2〉 참조).

표 IV-2 미디어교육 관련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2007-2020)

법안명 (발의 연도)	미디어교육진흥법안 (2007)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012)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013)	미디어교육 활성화 에 관한 법률안 (2018)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018)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
대표발의	이경숙	최민희	김희정	유은혜	신경민	정필모
목적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 한 미디어교육의 체계 적 활성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 미디어 폐해 최소 화	미디어와 미디어콘텐 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창의적 활용 능력 제고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를 통한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역량 강화	미디어와 미디어콘텐 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능동적 활용 능력 강화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 어콘텐츠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
미디어 정의	방송·통신·신문·잡지· 출판·영화·광고·인터 넷 등 불특정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 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제2조 제1호)	방송·통신·신문·잡지· 출판·영화·광고·인터 넷 등 대중에게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 달하는 수단·행위 또 는 그 내용 전반(제2조 제1호)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 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 (제2조 제1호)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 구 또는 수단(제2조 제 1호)	방송·통신·신문·잡지· 출판·영화·광고·인터 넷 등 대중이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 달하고 전달받는 도구· 수단·행위 또는 그 내 용 전반(제2조 제1호)	방송·통신·신문·잡지· 출판·영화·광고·인터 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 하고 전달받는 도구 ·수단·행위 또는 그 내 용 전반(제2조 제1호)
미디어 교육 정의	미디어에 관한 건전한 이해와 활용 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 의 교육(제2조 제2호)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 인 이해와 활용능력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형태의 교육(제2조 제2호)	미디어와 미디어콘텐 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창의적 활용능력 증 진을 통해 사회 구성원 으로서 소통능력을 제 고하는 교육(제2조제3 호)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 해 전달되는 정보와 역량,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 주적 소통능력을 증진 시켜 국민의 시민의식 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방송, 통신 등을 포함 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 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 태의 교육(제2조 제2 호)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 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 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제2조 제2호)

추진 체계 (실행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문화관광부 ○(실행조직)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미디어교육진흥기관, 미디어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실행조직)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실행조직)미디어교육진흥기관, 지역미디어교육센터 	<p>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제2조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실행조직)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 	<p>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주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실행조직)미디어교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국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주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실행조직)미디어교육위원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문광부장관 소속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 -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미디어교육사 자격 부여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교 교과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반영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시·도 지역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사 자격 부여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미디어교육진흥기관 및 지역미디어교육센터 지정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반영, 미디어교육전문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 계획 수립,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확정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1년 4월 21일 인출.

앞서 살핀 2장과 <표 IV-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디어교육을 관여하는 부처가 미디어 종류와 교육대상에 따라 문체부, 방통위,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와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이견 등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여섯 차례의 관련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정순원, 2018).

현재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은 취약하다. 정부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미디어교육 관련 각종 사업들의 추진과 시행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배상률 외(2020)는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미디어교육의 근거 및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정임 외(2018)는 미디어교육법이 마련되어야 미디어교육의 기반 구축은 물론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018년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 밝힌 해당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서론에서 제기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은 더욱 유효하다. 한 예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 중심적·보호주의적 정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게임 등 특정 매체의 과의존·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에 관한 법령과 정책은 관계 부처별로 수립되어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법령과 정책의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 교육을 받은 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수준은 최하위를 기록한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21.05.17).

표 IV-3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부처	법령	관련조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9.12.10. 일부개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제30조의 2(인터넷 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1.26. 일부개정)	제12조의2(게임과몰입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7. 일부개정)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2020.3.24. 타법개정)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19.7.2. 타법개정)	제21조(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평가 및 개선 등 조치) 제22조(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출처: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p.46.;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2013). 영유아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 방안. 26쪽. <표 II-2-3>의 내용 추가 및 업데이트함.

1) 관련 법률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의 상당수는 체계성과 효과성을 담보한 미디어교육의 실행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정비와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특정 부처만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법제 마련, 둘째, 미디어 주체들의 자정적인 노력, 셋째, 사용자(수용자)들의 비판적 사고 역량 강화. 정부 기관, 유관기관들은 첫째인 법적,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등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각 기관별로 따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책을 진행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 (H-초중등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법 제정이다. 현재의 리터러시 교육은 개별 미디어 산업 진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근본적 취지의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의 리터러시 교육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OO-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합의된 전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개전투 방식이라 다양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다. 학교미디어교육만큼은 교육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I-초중등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부처별 통합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관련 용어 등의 통일성을 기하는 미시적 정책부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도별 교육 방안, 부처별 중복 정책 제거 등의 거시적 정책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G-초중등 교사)

현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외부 위원을 구성하여 각 기관 관계자들 간에 협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J-초중등 교사)

교육부와 타 부처 등이 분리되어 학교 미디어 교육과 사회 미디어 교육이 분리되어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간에 두 부서간 연결점을 해줄 수 있는 업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부와 타 부처 간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 예산 사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통신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는 학교 이외의 일반 시민과 대중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도록 안내해야하기 때문이다. (K-초중등 교사)

명확한 근거로써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각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해도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명확히 사업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내 미디어 리터러시 업무는 눈치를 보며 여러 부서에서 맡고 싶지 않아 떠미는 일거리에 불과하게 된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이 너무 상이해 원활한 협업과 조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 간의 협의체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교육위원회 등의 기구 신설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구의 신설 역시 법안의 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L-초중등 교사)

사회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 및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외부 강사 등의 질 관리, 시수 확보 등을 통한 지속성 지원,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도출 등은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분업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등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각 부서 간에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각 부서별로 특징 있는 미디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M-초중등 교사)

(2) 미디어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협업 저해 요인

2007년 이경숙 의원이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관련 주체들 간의 이견 등으로 국외 문턱을 못넘고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관계 부처와 미디어교육 주체들 간의 협업이 어려운 현 상황과 이유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특화된 역할분담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모든 부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2020년 디지털미디어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와 부처간 협의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역할분담의 추진이 부처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현재로선 미디어교육지원법 등의 법적 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본다. (B-교수)

부처 간 협력, 컨트롤타워 구축 등은 수없이 많이 거론되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처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부처가 원래 해오던 사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율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C-교수)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고유 업무임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립 초기 단계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틀을 잘 짜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미디어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유관기관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중복된 업무와 지원을 피하고, 부처별로 업무를 분장해줄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 미디어정책, 미디어자료 개발, 정책과 자료의 보급 등의 중심 업무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초중등 교사)

많은 단체들이 미디어교육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체 간 협업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 단체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 들렸던 이야기들은 각 단체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없고 배제하게 된다' 는 뉘앙스의 평을 들은 적이 있다. 분절적 정책 추진, 중복된 정책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정책을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의 속도에 따라가기 급급하여 일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N-초중등 교사)

국내 미디어교육의 실행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미디어교육이 부처별로 분리되고, 파편화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각 기관의 예산과 사업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미디어교육 자체가 정책사업의 목표를 위해 분절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이런 흐름이 매체별로 분리된 미디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B-교수)

(3) 미디어교육 추진체계 및 실행조직

미디어교육의 주관부처를 문화부(이경숙 의원 안, 김희정 의원 안), 방통위(신경민 의원 안, 정필모 의원 안) 등 단일부처에 둘 것인지, 최민희(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유은혜 의원 안(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공동)처럼 복수의 부처들이 공동으로 주관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미디어교육 추진체계 및

실행조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미디어교육관련 법제정과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협의한 것처럼 각 부서(교육부, 방통위, 문화부)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무총리 산하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컨트롤 타워가 생기고 예산중복도 방지할 수 있고 종합계획도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펼쳐져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하는 작업이라 정치적인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초중등 교사)

학교 미디어교육의 컨트롤 타워를 교육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 교육은 그 대상과 교육 목표,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컨트롤 타워를 교육부로 하고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등과 산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체계로 가야할 것이다. (O-초중등 교사)

모든 교육이 결국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육에 관한 정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구성되므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UU-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미디어교육은 이제 다른 기관이 아닌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해 각 기관들이 애쓰고 있는 부분 중에서 중복이 아주 많다. 이제 각 기관들은 평생교육차원의 미디어교육, 사회미디어교육에 신경을 쓰고 교육부는 학교미디어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I-초중등 교사)

각 부처별로 나뉜 미디어교육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합의된 미디어교육의 정의가 나와야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미디어교육을 평가하고, 재분류하고, 배치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현재의 매체별로 나뉜 미디어교육을 통합

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B-교수)

사안별로 정부 부처의 미션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입법을 통해 협력 관계를 통해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큰 범주보다는 그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적 전문성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E-교수)

(4) 부처별 특·장점을 고려한 분업 및 협업 체계 구축

법제를 정비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의에는 관계 부처와 미디어교육 주체들도 동의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세부적인 조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곤 한다. 자문위원들은 주체들 간의 사전 조율과 협업을 통해 각 기관별 성격과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를 교육하는 각 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야를 잘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로, 현재 여기저기에서 팩트체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보니 이곳저곳에서 같은 또는 비슷한 계획안으로 이중으로 예산을 타는 사례도 있다. 한 곳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얻거나 좋아보였다고 해서 서로 따라 하기보다, 각 미디어 교육 기관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미디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협업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J-초중등 교사)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정부 유관 기관이나 지역 방송국에서 청소년 대상의 유사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역 미디어센터와 지방 방송국에서의 영상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 제공)을 중복적으

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된다. 최근 들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행사에서는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경연대회를 열거나 가짜 뉴스 분별법에 대한 강의를 늘려가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가짜 뉴스 관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제에 있어서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D-교수)

대표적으로 분절적 정책 추진의 사례는 뚜렷한 주제나 콘셉트 그리고 대상 간의 집중이 없는 콘텐츠 제작이라고 생각한다.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학년 군과 또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대상을 나눠서 심도 있게 개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절된 형태의 개발은 예산낭비가 심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교육 자료의 질도 떨어지며 내용의 중복도 많다. (VV-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부처 간의 협업과 조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별, 기관의 특색별로 집중 교육 연령을 분배하고 콘텐츠의 통일성을 주되 각자의 특색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 (VV-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현재 모든 부처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생애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이슈중심형 미디어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경험과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방통위에서 이 부분을 특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C-교수)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분업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등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각 부서 간에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각 부서별로 특징 있는 미디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M-초중등 교사)

2) (가칭)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 및 거버넌스 구축

(1) (가칭)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가칭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해당 초안을 연구진 차원의 검토와 자문, 교육부 차원의 검토 및 수정 작업,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가칭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바.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

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시행기관'이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받거나 미디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3.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처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다음 각 호의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디어 관련 사업자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총리 소속(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평가 지침 마련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조정·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③ 위원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관계부처 차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미디어교육 주관기관)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각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은 미디어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가 등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 이해·비평 및 제작·활용 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미디어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 관련 조사연구
 9.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교육 관련 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2. 미디어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대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

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칭)「미디어교육활성화 법률안」이 2018년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미디어의 정의를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는데 2018년 법률안에 포함된 게임물이 제외되었음.
- ② 미디어교육을 접근, 활용, 이해, 비평, 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
- ③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음. (2018년 법률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④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방통위원장이 각 부처 소속 고위직 공무원 중 1명씩을 간사로 지명하여 총 3명의 간사를 두어 2018년 법률안에 국무조정실장이 간사역할을 맡는 것에서 확대
- ⑤ 미디어교육 주관기관으로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가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주관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 (2018년 법률안도 세 개 부처가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기관 간 상호 협력 조항 명시 없음)

- ⑥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두 법률안 모두 공통되나 이번 법률안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영유아 및 초중등 재학생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2)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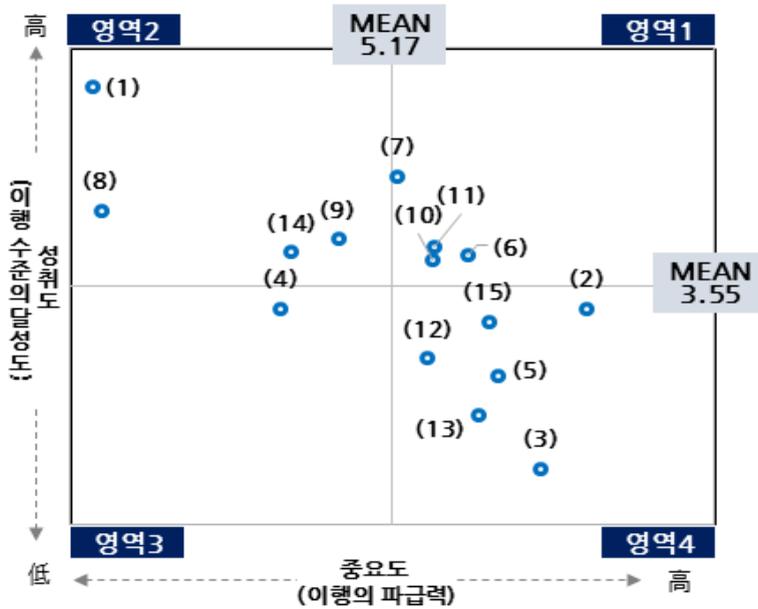
배상률 외(2020)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에서 교사, 교수,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 등 152명의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위한 15대 정책 과제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하였다. <표 IV-4>는 15대 정책 과제와 전문가들이 각각의 중요도 및 성취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IV-1]은 총 15개의 미디어교육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진단한 중요도(이행의 파급력)와 성취도(이행 수준)를 2×2 매트릭스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IV-4 중요도-성취도 IPA 분석결과

내용	전체			교사 출신 그룹			비교사 출신 그룹		
	중요도	성취도	영역	중요도	성취도	영역	중요도	성취도	영역
(1) 청소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4.03	4.34	2	4.33	4.25	2	3.78	4.42	2
(2)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5.91	3.46	4	6.07	3.65	1	5.78	3.30	4
(3)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5.74	2.82	4	5.84	2.77	4	5.65	2.87	4
(4)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	4.75	3.46	3	4.78	3.41	3	4.72	3.51	2
(5)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	5.58	3.19	4	5.80	3.13	4	5.40	3.24	4

내용	전체			교사 출신 그룹			비교사 출신 그룹		
	중요도	성취도	영역	중요도	성취도	영역	중요도	성취도	영역
(6)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제재	5.46	3.67	1	5.81	3.52	4	5.17	3.80	1
(7) 스마트폰, 게임 등 미디어 과의존/중독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보급	5.19	3.99	1	5.43	4.33	1	4.99	3.70	2
(8) 올바른 미디어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	4.07	3.85	2	4.29	3.90	2	3.88	3.81	2
(9) 미디어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지원	4.97	3.74	2	4.99	3.83	2	4.95	3.66	2
(10)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지원	5.33	3.65	1	5.46	3.84	1	5.22	3.49	4
(11) 미디어 과의존 초등학교 생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5.34	3.70	1	5.61	3.84	1	5.11	3.59	1
(12) 관련부처별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적 협업 및 조율	5.31	3.26	4	5.29	3.51	3	5.33	3.06	4
(13)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	5.50	3.04	4	5.52	3.12	4	5.48	2.98	4
(14) 미디어 관련 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	4.79	3.68	2	5.04	3.71	2	4.58	3.66	2
(15) 미디어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	5.54	3.41	4	5.77	3.39	4	5.35	3.42	4

* 출처: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pp. 298-299



* 출처: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p.300

그림 IV-1 정책의 중요도-성취도 IPA 분석결과(전체)

〈그림 IV-1〉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는 낮은 정책과제들이 몰려있는 영역4이다. 관련 부처별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적 협업 및 조율(12번)과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13번)도 영역4에 포함되어 있다.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마련과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도에 비해 이행 수준이 미비함을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임 외(2018)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과정(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32명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 지원, 규제 및 협력, 기반구축이란

4대 영역 총 1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된 다섯 개 정책은 학교 내 미디어교육 의무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시행, 미디어교육법(가칭) 제정, 매개자 미디어교육 시행,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나타났다

표 IV-5 미디어교육 정책 평가요인 가중치 및 우선순위(전체)

1단계 평가항목	2단계		최종(복합)		
	평가항목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교육 (가중치 .429)	학교 내 미디어교육 의무화	.380	1	.163	1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시행	.247	2	.106	2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강화	.148	4	.064	7
	매개자 미디어교육 시행	.225	3	.096	4
지원 (가중치 .187)	지역미디어센터 확대	.197	3	.037	10
	미디어 이용지원 시스템 확립	.249	2	.046	9
	교육콘텐츠 개발과 지원	.412	1	.077	6
	전환기 미디어교육 지원방안 개발	.142	4	.026	15
규제 및 협력 (가중치 .119)	미디어사업자의 미디어교육 지원 의무화	.302	1	.036	11
	이용자 친화적 기술 개발 및 적용 의무화	.188	4	.022	16
	민관 협력체계 구축	.283	2	.034	12
	미디어교육 관련 유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227	3	.027	14
기반구축 (가중치 .265)	미디어교육법(가칭) 제정	.365	1	.097	3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307	2	.081	5
	미디어교육 R&D 기능 강화	.212	3	.056	8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116	4	.031	13

* 출처: 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2018). 지능정보사회 미디어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인식 연구: 계층분석과정(AHP)을 중심으로, p.24.

이처럼, 법제 정비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가칭)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고 미디어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디

어교육의 핵심 대상인 초등 및 중등 교육 주관부처의 장이자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조정과 관계 부처 간 협력 유도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가 미디어교육 위원회의 위원장을 함으로써 정책의 상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미디어교육을 미디어교육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로 하여금 공동주관토록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의 경계선을 긋거나, 매체 종류 별로 구분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과 최근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위해 부처별 특·장점을 살리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재 외(2017)는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영역에서, 누군가는 미디어교육을 위해 양보해야 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주도적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의미 있는 조력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p.128)고 지적하며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각 부처별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연하게 갖고,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민관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외에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타 부처 관계자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미디어환경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디어교육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미디어교육 R&D,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등 영역별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2.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의 체계성 강화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해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나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당장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미디어교육의 핵심부처인 교육부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의 정책 방향 설정과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방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미디어교육 연구 전문가 양성 및 지원²⁹⁾

세계적인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미디어 문화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그런 연구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 등을 교육청, 학교,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시민단체, 미디어 기업,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참고]

호주 울릉공대학교의 조기교육센터(Early Start Discovery Space):

<https://www.uow.edu.au/the-arts-social-sciences-humanities/schools-entities/early-start/early-start-discovery-space/>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의 MOI 연구소:

<http://www.monilukutaito.com/en/>

캐나다 미디어스마트: <https://mediasmarts.ca/>

미국 커먼센스미디어: <https://www.common sensemedia.org/>

미국 MIT 웰러 교사 교육 프로그램: <https://education.mit.edu/>

영국 LSE: <https://www.lse.ac.uk/my-privacy-uk>

29) 해당 내용은 경인교육대학교 정현선 교수가 집필하고 연구진이 편집한 내용임.

디지털 환경에서 제기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과 학습의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체적이어서 시의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역량 및 협업 역량을 갖춘 미디어 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의 학교미디어교육 센터나 각 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최소 2명 이상의 정규 연구직을 고용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청, 지역사회 내 대학, 공공기관, 미디어 산업, 시민사회단체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문화, 학습 역량, 시민성의 실태와 문제적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박사급 인력의 고용이 어렵다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학교미디어교육 연구센터를 별도로 수립하여 학교미디어교육센터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및 효과성 평가와 함께 다른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국내 지역 간 다양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국제적인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비교 및 정책적 협력 도출 등의 연구와 정책 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학의 연구소, 연구 기능을 갖춘 국가 정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센터를 수립하고 이곳에서 미디어 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해당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해당 기관들을 학교미디어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소를 위탁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 사업 또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교육연계형' 지원 사업 등의 지정 연구 과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 대학 내 예비교사 필수과목 통한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미디어 교육을 전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인데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인식이 부족하다. 교사가 의지는 있으나 접근성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변화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P-초중등 교사)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중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사연수나 교육자료 제작도 필요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가이드 영상부터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원격연수에 활용해야 한다. (Q-초중등 교사)

각 학교에 자유학년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받으면 어디엔가 꼭 써야 하기 때문에 강사를 고용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무얼 할까? 수업에 함께 참여 안하는 교사가 태반이다. 강사 파견을 위한 무분별한 미디어 교육 예산, 이게 정작 미디어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사를 대신해서 수업을 하고 돈을 지출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사는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강사가 주가 아니다. 미디어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대신 수업을 대신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XX-초중등 교사)

이렇게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역량 함양과 관련된 여러 요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내에 별도로 미디어교육 관련 전공 학과를 당장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전국 교육대학 내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필수과목으로 미디어/정보/디지털 리터러시의 과정을 최소 2~3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박사급 이상의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해 모든 예비 교사들이 미디어교육 관련 강좌(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수강토록 한다면 학교현장에서 교과연계형 미디어교육의 교수 역량이 일정부분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시작으로 추후 미디어교육 영역을 확대해 미디어교육 전공 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배상률(2014)은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미디어교육 전공자 배출 및 교사 임용 예정자들을 위한 단기 미디어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학교미디어교육 제도화

학교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에 ‘교육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규 수업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성공하려면 학교에 ‘교육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적 정착이 되려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규 수업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체 학교급 수업, 교과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교육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핵심적으로 가르치면서, 아웃소스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H-초중등 교사)

학교 미디어교육은 당연히 교육부 주도로 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의보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목표로 해서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미디어교

육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교과 내에서 조금씩 일부 하던 것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교육법 안에서 제도는 다 준비가 되었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W-초중등 교사)

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관련한 정보를 학습할 기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장에 프로젝트 학습, 과정중심평가가 안착할 때에 관련한 '의무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교사의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역량을 갖추는 효과가 있었다. (R-초중등 교사)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역량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O-초중등 교사)

따라서 전체 학교급 수업이나 교과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으로 결실을 보려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핵심적으로 가르치면서 외부 요소들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인데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인식부족, 교사가 의지는 있으나 접근성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변화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2025 신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과목별로 성취기준을 넣어 수업 속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초중등 교사)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정규과목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창체 시간 등에도 소화해야 할 다양한 교육들이 많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다. 나 같은 경우, 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의 내용과 접목할 수 있을 때나 아니면 아예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 (S-초중등 교사)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생들에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사회 교과, 정보 교과 등에서 관련 단원(성취기준)들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른 내용이 상당히 있으므로 교과서 개정 시기에 이들 성취기준에서 파생된 교과서 내용을 강화하여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보여진다. 아울러 범교과 영역 필수 학습 시수에 일부라도 편성되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T-초중등 교사)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들도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해 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청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담당하는 장학사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학교에 주로 에듀테크 측면만 강조하고 그 부분의 연수가 많이 진행된다. 따라서 담당 장학사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초중등 교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직을 전문영역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에 필요한 공간이나 제도, 자료 유형, 예산 지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U-시도교육청 담당자)

각 학교에 운영을 넘겨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고 연구를 하는 데 힘들어한다. 전문직들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청에서 전문 교육 기관 설립이 추진 되었으면 한다. (DD-초중등 교사)

4) 국립미디어교육센터 구축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미디어교육 현장의 개선이 어려웠던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었고 중심이 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따라서 학교미디어교육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거시적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중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배상률(2014)은 학교 미디어교육 총괄운영 및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미디어 교육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및 단체 협의체 운영을 위한 미디어교육 국립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클레미(CLEMI, 국립미디어교육센터)’가 꼽히고 있다.

프랑스는 클레미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해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클레미는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프랑스 전역의 조합과 학부모 대표, 교육연맹, 언론 매체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하여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클레미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있는 각 학교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관련 자료 제공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처럼 클레미를 운영하여 부처 단위의 분절적 운영보다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전통 미디어는 물론 뉴미디어까지 총괄하는 미디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G-초중등 교사)

프랑스에서 미디어 교육을 총괄하는 클레미라는 곳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의 도움으로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한 시민의 형성 같은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실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사회도 이런 클레미처럼 미디어 교육을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S-초중등 교사)

국가 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여러 부처의 산하기관이므로 하나의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정책이 다르고 중요한 방점이 다르다 보니

교육의 하위주제가 제대로 연구되어있지 않거나, 기초연구는 되어있더라도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되어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어떤 주제는 중복된 자료를 난립하여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해당 컨트롤 타워에서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프랑스의 끌레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초중등 교사)

하지만 끌레미와 같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국립미디어교육센터를 만들 경우에도 그 기관을 만드는 주체와 그 추진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계속 언급됐던 미디어교육의 거버넌스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미디어교육을 관련 부처(문체부, 방통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주관한다고 결정된다 한들 국립미디어교육센터를 교육부 산하에 둘 것인가,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인가,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조차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국립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소 안일한 접근일 수도 있다. (QQ-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3. 미디어교육 지역 협의체 및 실천공동체(CoP) 지원

1) 미디어교육 지역 협의체 구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광역 단위 지역별로 미디어교육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미디어교육 정책의 큰 틀과 전체적인 방향은 정부 차원에서 정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미디어교육 직무연수의 경우 각 지역의 재단 산하 지사들이 교육 일정과 프로그램, 강사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비롯한 학교 미디어교육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미디어교육 분야에서도 지역의 재단 소속 미디어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도 현재 전국 10곳에 있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들이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미디어 체험과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대로 기관별로 교육 분야와 내용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미디어 강사들의 운용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학교나 사회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질·인적 자산의 낭비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미디어교육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미디어교육 추진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개별 사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기관별 교육 영역과 인력 배치 등을 조율하거나 통합해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 미디어교육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도권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대구·경북 지역이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협업을 통해 교육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효과적 시행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2019년 7월에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나

로 'KNU 초·중등 미디어교육랩' 사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비판적 미디어 콘텐츠 이해 능력과 능동적 미디어 활용 능력 개발을 위해 초·중·고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교수 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초·중등 교원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법 과정을 운영하며, 미디어교육 산학연관 협력포럼 등을 통해 지역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방안을 찾고 우수수업모델 발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대학교는 기존에 교사 미디어교육 직무연수를 해오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디어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먼저 지역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교육청과 언론인 단체, 산업계 등을 함께 참여시켰다. 또 이 같은 움직임들을 지역의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에게 홍보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다.



* 출처: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내부자료.

그림 IV-2 산학연관 협력 미디어교육 연속 세미나

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에는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직무연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두 기관이 연수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교육 내용과 강사진을 구성해 연수를 진행했다. 이 연수에는 초·중·고 교사들을 비롯한 백여 명이 참여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교사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졌고, 연수 이후 만족도 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해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내부자료.

그림 IV-3 대구·경북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공동 개최

이렇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교육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언론진흥재단, 경북대학교와 등 4개 기관들이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산학연관 미디어교육 지역 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기술·정보교류 및 교·보재 활용 협력, 커리큘럼 표준화 및 공동 연구개발 노력,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유기적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교육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모어나갈 계획이다.

(2)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과 운영 공동 참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7월에 교육부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부터 미디어교육 관련 세미나와 교원 미디어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오던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를 비롯해 지역의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과 언론사 등을 참여시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미디어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학생들의 체험이나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자료.

그림 IV-4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 추진 목표와 내용

대구·경북 지역에서 미디어교육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협력사업들은 아직은 완전한 형태의 지역 미디어교육 협의체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협력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참여하는 지역 미디어교육 기관 단체들이 확대된다면 각 기관과 단체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 요구에 맞는 최적의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교육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천공동체(CoP) 운영 및 지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실천공동체(CoP)의 관점으로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지원 해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런 지원들을 통해 공동의 주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배우고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사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별, 학교급별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기관은 물론 교사 개인들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는 교사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처럼 아직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은 교육영역은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결국 ‘거버넌스’도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거버넌스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V-초중등 교사)

미디어교육 현장 측면에서 보면 CoP 활동이 거버넌스 중심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회를 만들거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연수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들은 비슷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CoP 경우 자생성과 자발성을 그 활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는 결국 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되고, 사회적 이슈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방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기관에서는 교사공동체가 자생성, 자발성을 갖추어질 때까지 지역별 CoP를 만들거나 지역별 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하거나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역별 또는 학교급별 공동체 네트워킹, 홍보 등의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V-초중등 교사)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일선학교 교육에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의 경우, 연구 개발팀과 수업 실행팀으로 구분하여 연구와 실행의 교차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U-시도교육청 담당자)

일단 관심을 가진 현장 교사들을 모아서 연구 집단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를 현장 교사들이 직접 고민하게 하는 전문가 집단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미디어 네트워크 같은 전국 조직이 필요하다. (W-초중등 교사)

4.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1) 강사들의 교육영역 중복과 누락

미디어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권익 및 시청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동안 신문법에 근거하여 미디어와 뉴스의 이해, 활용, 제작, 책임과 윤리 등을 미디어

교육의 기본 틀로 갖고 있는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영상과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구체적인 교육의 기본 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의 미디어교육의 방향은 얼핏 보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최근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미디어교육 영역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구분했을 때는 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구분되어 신문 미디어교육, 방송 미디어교육이 가능하겠지만 미디어 현장은 갈수록 그런 이분법적인 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의 성격 자체가 급하게 변화하고 융합하는 경향과 맞물려 신문을 기본 바탕으로 출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에 동영상이나 라디오, 광고 등이 모두 활용되거나 제작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영상이 바탕이었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에 비평과 분석이라는 리터러시 분야가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FF-미디어교육 강사)

현재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원래 언론진흥재단은 비판적 읽기에 초점을 맞춘 신문 및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주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작에 초점을 맞춘 영상 제작이 주를 이뤘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미디어 환경과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교육 사이에 많은 접점이 생겼다. (GG-미디어교육 강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그동안 영상 제작을 미디어교육의 주요 분야로 삼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어 '미디어 및 뉴스 리터러시'를 주요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HH-미디어교육 강사)

이 때문에 시청자들의 방송 제작을 돕기 위한 시설이나 교육 장비 대여가 중요 사업이었고 동영상 제작 및 스튜디오 실습 등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에 특화된 기관이었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허위조작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여겨져 오던 팩트체크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Home >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미디어참여 지원
방송시설 및 장비 지원
방송장비사용법
방송시설사용법

총 57건 1/6 페이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
57	팩트체크 교육 가이드 -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길라잡이(성인2)	≡	자진영	2021-03-02	201
56	팩트체크 교육 가이드 - 팩트체크 A to Z(성인1)	≡	자진영	2021-03-02	168
55	팩트체크 교육 가이드 - 디지털 세상 정보 판별법(초등)	≡	자진영	2021-03-02	183
54	팩트체크 교육 - 팩트체크 뉴스 평가와 과제(성인)	≡	자진영	2020-12-31	147
53	팩트체크 교육 - 팩트체크 주제를 찾아오(초등)	≡	자진영	2020-12-31	173
52	팩트체크 교육 -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 방법(성인)	≡	자진영	2020-12-31	79
51	팩트체크 교육 - 허위정보, 어떻게 막을까?(성인)	≡	자진영	2020-12-31	73
50	팩트체크 교육 - 진실을 가리는 심리(관람) 팩트체크(성인)	≡	자진영	2020-12-31	84
49	팩트체크 교육 - 나도 팩트체크(중고등)	≡	자진영	2020-12-31	204
48	팩트체크 교육 - 팩트체크 콘텐츠 제작2(초등)	≡	자진영	2020-12-31	87

*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s://kcmf.or.kr/cms/board/board_list.php?btype=lesson_plan&menuldx=271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그림 IV-5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팩트체크 교육 가이드 자료

팩트체크 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0년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미디어교육 분야이다.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시민 미디어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올해는 더 확대되고 커리큘럼도 더욱 정교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들어 각 기관별 미디어교육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은 것 같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영상 미디어의 힘이 더욱 커졌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을 목표로 유사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팩트체크 교육도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미디어교육을 발 빠르게 선보이려고 하는 각 기관의 공통된 특징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위원회’ 같은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교육이 중복될 수도, 그래서 더 필요한 미디어 약자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구명 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II-미디어교육 강사)

이처럼 교육 영역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

중복도 문제지만 누락도 문제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해 대다수 기관의 미디어 교육 내용에 미디어 교육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미디어 접근(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매우 미비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어디서 접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찰하고, 좋은 접근법(플랫폼)을 찾는 것은 미디어와 함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 생각된다. (GG-미디어교육 강사)

이와 함께 이들은 미디어 교육 관련 교재의 교육 내용 서술이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쉬운 용어와 개념이 요구되며 신문, 영상, 카드 뉴스 등에 국한돼 있는 미디어 제작 활동도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미디어를 뉴스, 유튜브, SNS 등 종류별로 접근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비평하고 있는 것도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급속히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개별적 접근보다는 CML의 framework처럼 미디어 분석에 공통의 분석틀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GG-미디어교육 강사)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미디어 교육용 콘텐츠들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잘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묻혀있는 콘텐츠들도 많고 내용 전문가의 참여와 실제 활용 가능한지가 의심스러운 콘텐츠들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영상의 경우 검증이 필요한 콘텐츠도 눈에 띄고, 좀 더 계획적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교육 전담인력의 불합리한 운용 개선

이처럼 미디어교육 영역의 중복이나 누락은 교육 인력 운용의 불합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디어교육 인력풀 구성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주로 매년 초에 강사를 선발해 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들어 미디어교육 기관들의 교육영역이 중복되면서 양쪽 기관의 강사풀에 복수로 소속되어 두 기관의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큰 범주인 미디어 및 뉴스 리터러시를 표방하고 있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영상 제작 분야 등을 하위 범주에 포함해 교육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영상 미디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활용이 크게 늘면서 학교에서 영상 제작 교육이 병행되기를 바라다 보니 강사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수업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들은 상당수가 기자 출신이거나 신문교육에 특화된 강사들이고 재단에서도 신문 관련 수업으로 오랜 기간 여러 단체나 학교를 지원했던 터라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강사가 극소수인데 갑자기 영상 제작기술까지 가르치고 결과물을 영상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업들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이자 제작이 가능한 강사들의 몫이 된 것이고 기존 강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FF-미디어교육 강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내용에 허위정보 판별과 제작 콘텐츠 구성 및 평가를 위한 비판적 읽기 중심의 뉴스 리터러시 영역이 포함되었고 언론진흥재단에는 신규와 경력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방송이나 영상 출신 강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교 현장에서의 영상 제작 관련 수업 사례가 늘어났다. 학교들의

영상 제작 관련 요구도 늘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전문성을 쌓아오던 두 단체에서 발생한 교육 내용의 중복은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강사의 전문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GG-미디어교육 강사)

언론재단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지원처인 학교에서 제작 교육이 병행되기를 바라다 보니 어느 순간 강사연수에서 영상 제작 교육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수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솔직히 언론재단 강사 중에 영상 제작이 가능한 강사는 전체 10% 정도가 될 것이다. 모두 기자 출신이거나 신문교육에 특화된 강사들이고 재단에서도 신문 수업으로 오랜 기간 여러 단체와 학교를 지원했던 터라 제작을 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갑자기 영상 제작기술까지 가르치고 결과물을 영상물로 내놓으라 하니 선생님들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HH-미디어교육 강사)

부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의 경력에서 차이가 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의 색깔을 넘어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교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제작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AA-초중등 교사)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도 불합리한 강사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비평가 분석 분야의 일반강사를 제한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은 영상 제작 교육에 맞춰져 있는 데다 장비 대여와 영상물을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방송국 못지않은 센터도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리터러시를 강조하며 팩트체크 교육을 강화하

고 있어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풀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내부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평 수업을 하고 있는 극소수의 강사를 보유한 센터 이외에는 기존의 강사풀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강의를 겸하고 있는 강사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강사들이 갑자기 팩트체크에 힘을 싣는 모양에 혼란스러워하며 강의는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 경력 10년 이상의 제작 전문 강사들이 팩트체크 강의를 위해 새로 지원하고 연수에 참여하고 배우는 현상이 발생한다. (HH-미디어교육 강사)

기존 연구(김양은 외, 2019)를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한 미디어센터 강사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도움이 될 강좌들을 찾아서 수강’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강사모임/단체를 통해 사례 공유/연구 진행’을 통해 필요한 교육 역량을 키웠고, ‘소속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연수 참여)’가 세 번째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IV-6〉 참고). 다시 말해,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은 새롭게 변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가다 보니, 최근 현상과 같이 기존과 다른 영역의 교육 분야를 접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IV-6 미디어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노력

개별 강사의 역량 강화 노력	사례 수	비율(%)
개별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도움될 강좌들을 찾아서 수강	106	39.0
강사모임/단체를 통해 사례공유/연구 진행	71	26.1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연수) 참여	64	23.5
대학원 진학	18	6.6
기타	13	4.8
합계	272	100.0

*주) 중복응답 허용

* 출처: 김양은 외(2019).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 운영 현황 조사. p. 281.

이처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의 중복과 강사 운용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실제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인 학교 등에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은 학교 밖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반면에 학교 내에서는 누가 해도 되고 아무도 안 해도 되는 교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교육이라는 거다. 명확한 개념도 없고 교육 내용도 도덕 교과나 국어 교과, 정보 교과, 인성이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 활동과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 보니 미디어 교육 자체가 미디어 강사의 역량과 학교 교사의 관심도에만 의존하는 교육, 이벤트성 교육,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교육의 효율성도 효과성도 떨어진다. (GG-미디어교육 강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영상을 제작하기에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은 처음부터 뉴스라는 소재로 너무도 특화된 수업을 신문과 e-NIE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며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것을 인정하며 더 잘하면 될 일인데 서로 해보지도 않은 수업을 굳이 새롭게 하려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되면 짧게는 지원처들이 유사한 수업을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길게는 같은 길에서 만난 강사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며, 학교는 이쪽 저쪽 예산으로 다양한 수업이 아니라 비슷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특별할 필요가 없는 수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분명한 색깔로 미디어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리터러시와 제작이라는 꼭 필요한 영역을 사이 좋게 나누어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잘 이끌어 오던 대표적인 미디어교육 기관이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자기의 고유 색깔을 잃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HH-미디어교육 강사)

사회 미디어교육 분야의 경우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한 기관에 속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기관을 걸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관별 교육 범위 혹은 초점을 맞추는 이슈나 미디어 장르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일반적인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부처간 업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사회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 및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외부 강사 등의 질 관리, 시수 확보 등을 통한 지속성 지원,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도출 등은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미디어교육 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늘면서, 결국 미디어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물적·인적 자산만 낭비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큰 혼선을 초래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강사 양성 및 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 제도나 강사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교육에서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 교육의 전문성 부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수교육뿐 아니라 강사의 교육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RR-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교강사 역량 강화 및 이를 위한 교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지향과 목표, 내용에 대한 합의는 매우 부족하고 이에 따라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어 생각했을 때,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주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학습자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형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혹은 생애주기별로 강점을 지닌 부처가 이에 개입하는 방향성을 제안해볼 수 있다. (A-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아카이브 구축

1) 미디어교육 정보 및 자료 접근·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여하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독자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다보니, 중복된 교재와 자료가 쌓이고, 교재와 자료의 주제도 부처별로 중장기적 계획 없이 근시안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교재와 자료의 집필자의 역량도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한 내용과 함량미달의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 배포되기도 한다.

교재 개발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급 및 활용방법이 제한적이고 매년 유사한 교재가 중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중략) 여전히 종이교재 위주여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적합지 않은 한계점도 갖고 있다. (C-교수)

강사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인프라, 정책 연구 등에 있어 중복되는 점이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시민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각 기관에서 쏟아져 나왔다. (중략) ‘미디온’, ‘포미’, ‘아인세’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의 종류, 대상,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서는 가려낼 필요가 있다. (E-교수)

이제 자료는 수없이 많다. 계속 비슷한 자료만 만들고 있으며,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매년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학습 자료의 신선함이나 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비슷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활용방법적인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WW-초 중등 교사)

이에 따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교강사들은 교수학습자료나 교재의 부족보다 접근성 및 활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활용한 적절한 자료를 찾고 유사한 주제를 담은 교육자료 중 우수한 것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지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실제적으로 많이 개발되어왔고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있지 않아 통합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교사가 의지는 있으나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변화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P-초중등 교사)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 간 맵핑 자료들이 보급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기존에 개발된 좋은 미디어 교육 콘텐츠나 미디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초중등 교사)

정책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것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X-초중등 교사)

(학교현장에서 미디어교육에) 활용하는 자료가 다양하지 않고 적절한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교과서에 나온 자료는 너무 예전의 것인 경우가 많다. (Y-초중등 교사)

미디어교육을 계속해오거나 역량이 있는 분을 제외하면 교육활동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별로 세분화되어있는 교육자료가 필수적이다. 미디어분야의 발전과 이슈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Z-초중등 교사)

2020년에 교육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손잡고 개발한 학교미디어교육 통합지원 포털인 미리네(miline.or.kr)가 기존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인세(digitalcitizen.kr),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온(edu.kcmf.or.kr),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포미(forme.or.kr) 등의 전 국민 대상 포털과의 차별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포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계 기관의 소식과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 명실 공히 미디어 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바란다는 지적도 있었다.

FORME나 아인세 등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털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중등학습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초중등 학교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교육포털로 기능한다면 다른 포털과 구분되고 활용도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교수)

중복된 정책보다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리네에서 여러 부처의 소식을 안내해 주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미리네가 통합적인 미디어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소식을 모으는 기능을 더 강화하면 좋을 듯하다. (AA-초중등 교사)

자문위원 상당수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개발된 자료들이 제각각 제작되어 교육 현장에 산만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일부는 부처 및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존 포털과는 별도로 각종 자료를 비교하고 최적의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통합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부처 간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 교재 등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가 필요하다. (BB-초중등 교사)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서 개발된 자료도 모두 개별 유통되어 학교로 전달되므로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목적을 갖는 자료들은 기관 간에 시기를 조율하여 일괄 배포한다면 학교에서는 교육 계획을 세우기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T-초중등 교사)

저작권,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강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시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CC-초중등 교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관여하는 부처와 산하기관은 제각각 별도의 웹사이트에 교육자료, 정책연구 보고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종합 포털 사이트를 표방하며 포미 웹사이트(forme.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의 미디어교육 자료 제공과 사업 홍보에 치중한 운영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종합 포털 사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경래, 2020).



그림 IV-6 한국언론진흥재단 포미 (문체부 산하)

마찬가지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 홈페이지도 재단에서 제작한 자료와 사업에 대한 홍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산하 10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각각 양산하고 있는 자료들이 올라와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온(edu.kcmf.or.kr)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아인세(digitalcitizen.kr)도 기관의 사업 홍보와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자료실 기능의 웹사이트로서 기능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최근 학교미디어교육 통합지원 포털을 표방하며 미리네(miline.or.kr)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미디어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일정 부분 미디어교육에 관여하는 공공성을 띤 주체들이 산재해 있다. 예로,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이러닝(e-learning)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도 미디어교육 사업을 결혼이민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V-7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허위정보 예방 홍보 캐릭터 국민심사

참여기간 | 2021. 5. 14 (금) - 5. 24 (월)

참여하기



온라인 강의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강의

실시간 원격교육은 방송 시간에만 시청 가능합니다.



나의 수강현황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교육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아인세 캠페인

자료실

교육 안내 및 신청

인터넷윤리 체험관



자료 검색

콘텐츠 리스트 다운로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세검색

공지사항

나의 동영상 시청유형?

교육신청

전체 자료

베스트 자료

추천 자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2020 아인세 창작음악제 장작곡부문 수상곡 음원(MP3)

인터넷윤리



디지털시민총서 06) 디지털의 흔적을 찾아서

인터넷윤리



디지털시민총서 04) 슬기로운 데이터 생활

인터넷윤리

* 출처: 미디어온 홈페이지. <https://edu.kcmf.or.kr/main/index.jsp>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아인세 홈페이지. <https://www.digitalcitizen.kr/main.do>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그림 IV-8 미디어온과 아인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아카이브 TOP5

- 1 [초등] 미디어 탐구생활
- 2 [중학] 미디어 탐구생활
- 3 [디지털 배어런팅] 코로나 시대에 아이와 인터넷 잘 사용하기
- 4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 핸드북
- 5 미디어 교육 해외에서는 어떻게?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학습이용환경

제작

개발

지원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English

과정안내

나의학습방

연수도음방

연수원소식

연수원소개



과정 검색

나에게 맞는 과정을 검색해 보세요.

*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ID 저장

바로가기



연수계획



수강신청



수강과정



이수증발급



연수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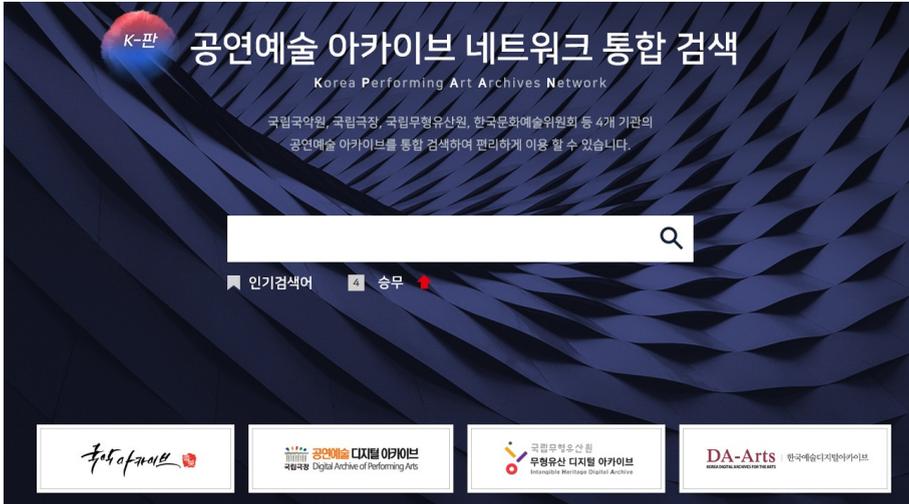
자주하는질문

* 출처: 교육부 미리네 홈페이지. <http://www.miline.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www.neti.go.kr/index.go>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그림 IV-9 교육부 미리네 및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앞서 살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유용한 자료에 대한 수월한 접근 및 활용과 양질의 콘텐츠의 파급과 선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의 니즈가 높다. 오정훈(2007)은 미디어교육의 확산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실천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경래(2020)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및 콘텐츠의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주장하며 “아카이브가 거버넌스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결과”(p. 95)라고 지적하였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개방 공유를 통해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 아카이브 그 자체가 거버넌스의 결과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래, 2020).

K-관(Korea Performing Art Archives Network)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소장한 공연예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아카이브이다. 김경래(2020)는 4개 기관별로 분산된 아카이브를 연결하여 연극, 무용, 국악,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통합 6만여 개의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K-관을 벤치마킹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합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의 각 주체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은 물론이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회가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등 부처 간 뚜렷한 협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통합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구축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효과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효과와 함께 관계 부처 간 협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케 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홈페이지. <https://www.ih.a.go.kr/k-paan/>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그림 IV-10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6. 지역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중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왕성한 시기이자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며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미디어교육 정책에 있어 사각지대와 지역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원격수업 환경 구축이 되지 않은 지방의 아이들이 참 많다. 기본 교육 환경 구축도 안 된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야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R-초중등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별, 기관의 특색별로 집중 교육 연령을 분배하고 콘텐츠의 통일성을 주되 각자의 특색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 (중략) 또한, 학교 안과 학교 밖 학생들의 위한 교육의 사각지대로의 보급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W-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다른 도에서는 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 교육 관련 장학사 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활발하고 실질적으로 인력과 센터가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 용어는 공문에서 단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디지털 리터러시’ 선도 학교가 올해부터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 각 학교에 운영을 넘겨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고 연구를 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DD-초중등 교사)

학교밖청소년은 학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무분별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과의존 혹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NN-청소년지원기관 담당자)

미디어 소외계층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며, 현재의 미디어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했을 때 더욱 더 많은 소외계층이 새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와 타 부처와의 상호협력 또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미디어 소외계층은 여전히 주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D-교수)

고령층은 오랜 기간 가장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고령층은 최근과

같은 빠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T-대학 연구원)

중도입국청소년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컴퓨터와 핸드폰 중독현상이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매일 핸드폰만 보고 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본국에서 데려온 아이가 시청하거나 찾아보는 외국 방송의 내용을 제대로 알 리가 없다. 재혼가정의 경우 이러한 미디어 오남용 사례가 더 많다. (LL-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 및 미디어 격차의 해소 노력을 위해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교육소외계층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쉬운 단계부터 살펴 줄 가정의 부재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MOU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E-초 중등 교사)

학생, 교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포함 (다양한 계층)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어르신 대상 교육과 다문화 이주민 대상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KK-미디어교육 강사)

공교육과정에서 대중교육이라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특수한 내지 특별한 집단(미취학 아동,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층, 다문화 가정,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수순을 밟는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미디어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QQ-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이 가능했을 때 비로소 미디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D-교수)

위기 청소년은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즉, 청소년안전망에 속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하는 필수연계기관이라는 공공기관조직이 있는데 이 중 꿈드림이라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다. 정책 대상자가 학교밖청소년으로 특정되어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 상황은 생활지도와 학업지원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의 효율적인 구동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 명의 기관장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부처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존의 생활지도와 학업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지도의 영역을 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NN-청소년지원기관 담당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 주요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업하여 해당 교육이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L-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케어하는 학교, 기관, 지역단체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PP-국책연구기관 연구자)

이주배경청소년은 대부분 한국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관을 통해 교육을 제공함과 더불어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MM-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약 3년 전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어나 용어교육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아이들 흥미 위주로 카메라와 캠코더 촬영법 학습으로 변질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이 재정립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LL-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차용하여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 및 미디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정리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분만 아니라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시민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 학교밖청소년, 결혼이주민, 이주배경청소년, 장애인 등 정책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정부 부처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센터들의 협조와 협업이 요구된다.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운영 현황을 연구한 김은규(2015)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미디어교육은 센터와 미디어교육 기관 등 해당 주체들 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존 인프라의 활용과 네트워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하였다. 강진숙 외(2017)도 성인

및 노인들을 위해 민주적 시민 교육을 겸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평생 교육과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보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점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주관부처를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로 한정하더라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V-11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부처 간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진숙, 조재희, 정수영, & 박성우. (2017).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 교육부(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전국 시도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 협의회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 김경래(2020). 미디어교육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연구 : 미디어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재, 장은미, 강신규(2017). 사회 미디어교육 현황 및 운영 전략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아미(2009).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동향, 미디어 교육연구 통권 제1호, pp.151-171.
- 김양은, 최성은, 고영준, 원환섭(2019).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운영 현황 조사 (2019년 방송환경조사사업). 서울: 한국방송학회.
- 김여라(201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은규. (2015).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운영 현황 점검과 방향성 모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시민미디어센터의 다문화미디어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1), 115-161.
-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0). 2020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2017. 02. 13.).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2021a).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K02050200&boardId=1025&cp=1&boardSeq=51236>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 방송통신위원회(2021b). 202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K02050200&boardId=1025&cp=1&boardSeq=51181>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 방송통신위원회(2021c). 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300&dc=K02050300&boardId=1078&cp=1&boardSeq=51051>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 배상률(2014).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이창호, 이정립(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I: 초등학생》(연구보고 20-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2018). 지능정보사회 미디어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인식 연구: 계층분석과정 (AHP)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2), 7-40.
- 여성가족부(202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20

- 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오미영(2013).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정훈(2007).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쟁점과 방향,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9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순원(2018). 미디어교육법제 현황과 입법 방향. 교육법학연구, 30(3), 131-154.
- 정현선, 박유신, 전경란, 박한철(2015).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정현선, 심우민, 윤지원, 김광희, 최원석(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1: 해외 사례 조사(연구보고 20-R17-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21. 05. 17). 피싱 메일 몰라?...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95403.html>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국외문헌]

- Hobbs, R.(2016). Literacy: Understanding media and how they work. In R. G. Picard(Ed.). What Society Needs from Media in the Age of Digital Communication(pp. 131 -160). Porto: Media XXI.
- Mäkinen, K.(2019). Words Are Actions: More Efficient Measures against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Public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handle/10024/161753>.
- Media Literacy Now(2020). U.S. Media Literacy Policy Report 2020: A state-by-state survey of the statu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laws for K-12 schools. <https://medialiteracynow.org/wp-content/uploads/2020/01/U.S.-Media-Literacy-Policy-Report-2020.pdf>.
- Mendoza, K.(2020, 9. 22). Essential Guide to Digital Citizenship for CIP A and E-Rate. Common Sense Media. <https://www.common sense.org/education/articles/essential-guide-to-digital-citizenship-for-cipa-and-e-rate>
- Smahel, D. & MacHackova, H & Mascheroni, G. & Dedkova, L., et al.(2020) EU Kids Online 2020: survey results from 19 countri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http://eprints.lse.ac.uk/103294/1/EU_Kids_Online_2020_March2020.pdf.
-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2019). Schools and Libraries (E-rate) Program: Program Overview, <https://www.usac.org/wp-content/uploads/e-rate/documents/Handouts/E-rate-Overview.pdf>.
- Ward, M. R. (2006). The Effects of the E-Rate Internet Subsidies in Education.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940092> or <http://dx.doi.org/10.2139/ssrn.940092>.

[온라인 자료]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홈페이지. <https://www.iha.go.kr/k-paan/>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교육부 미리네 홈페이지. <http://www.miline.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www.neti.go.kr/index.go>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국가평생교육원 K-MOOC. http://www.kmooc.kr/courses?search_query=미디어교육/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1년 4월 21일 인출.

산나 마린(Sanna Marin) 내각 국정과제 전문.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161935/VN_2019_33.pdf?sequence=1&isAllowed=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https://kcmf.or.kr/cms/>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s://kcmf.or.kr/cms/board/board_list.php?btype=lesson_plan&menuIdx=271에서 2021년 5월 10일 인출.

아인세 홈페이지. <https://www.digitalcitizen.kr/main.do>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윌레(Yle) 뉴스. https://yle.fi/uutiset/osasto/news/nearly_half_of_kids_in_finland_face_harassment_online/10798767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https://factchecker.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포미 홈페이지. <https://www.forme.or.kr/>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핀란드 게임주간 펠리비코(Game Week). <https://www.peliviikko.fi/>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핀란드 국립시청각연구소 자료 “왜 미디어교육인가(Why Media Education)?”.
https://kavi.fi/sites/default/files/documents/whymediaeducation_esite.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한국언론진흥재단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koreapressfoundation>
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Australian Core Skills Framework, Pre Level 1, 2017. https://docs.employment.gov.au/system/files/doc/other/acsf_prelevel_1_2017.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Australian Media Literacy Alliance. www.medialiteracy.org.au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Congress.Gov S.2240 – Digital Citizenship and Media Literacy Act.<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240/text>에서 2
021년 5월 3일 인출.

Creative Commons. <https://creativecommons.org/tag/lesson-plans/>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igital Literacy Skills
Framework」. [https://www.dese.gov.au/uncategorised/resources/digital-
-literacy-skills-framework](https://www.dese.gov.au/uncategorised/resources/digital-literacy-skills-framework)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EAVI(MEDIA LITERACY for CITIZENSHIP). <https://eavi.eu/>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Strategy Plan. [https://www.esafety.gov.au
/sites/default/files/2019-10/eSafety%20Strategy%20Plan.pdf](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19-10/eSafety%20Strategy%20Plan.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EU 키즈 온라인(EU Kids Online) 2020 국제 보고서. [https://www.lse.ac.uk/
media-and-communications/assets/documents/research/eu-kids-on-
line/reports/EU-Kids-Online-2020-10Feb2020.pdf](https://www.lse.ac.uk/media-and-communications/assets/documents/research/eu-kids-online/reports/EU-Kids-Online-2020-10Feb2020.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Media literacy and safe use of new media(United Kingd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68-media-literacy-and-safe-use-new-media-united-kingdom-england>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KAVI. <https://kavi.fi/en/media-education/>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Microsoft. <https://www.microsoft.com/en-us/digital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EDIA LITERACY IN FINLAND: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https://medialukutaitosuomessa.fi/en/>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EDIA LITERACY IN FINLAND: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https://medialukutaitosuomessa.fi/mediaeducationpolicy.pdf>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CTE). <https://ncte.org/statement/fairusemedia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section/learning/lesson-plans>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NORDICOM. 「Finland's national policy for media education updated」. <https://www.nordicom.gu.se/en/latest/news/finlands-national-policy-media-education-updated>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Ofcom. <https://www.ofcom.org.uk/research-and-data/media-literacy-research/media-literac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Open Education Resources. <https://www.edutopia.org/open-educational-resources-guide>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Richard Wallis & David Buckingham (2019) Media literacy: the UK's undead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5:2, 188-20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286632.2016.1229314>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 School and Library Eligibility. <https://www.usac.org/e-rate/applicant-process/before-you-begin/school-and-library-eligibility/>에서 2021년 5월 3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자문위원 리스트

번호	ID	소속 구분
1	A	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2	B	교수
3	C	교수
4	D	교수
5	E	교수
6	F	교수
7	G	초중등 교사
8	H	초중등 교사
9	I	초중등 교사
10	J	초중등 교사
11	K	초중등 교사
12	L	초중등 교사
13	M	초중등 교사
14	N	초중등 교사
15	O	초중등 교사
16	P	초중등 교사
17	Q	초중등 교사
18	R	초중등 교사
19	S	초중등 교사
20	T	초중등 교사
21	U	초중등 교사
22	V	초중등 교사
23	W	초중등 교사
24	X	초중등 교사

번호	ID	소속 구분
25	Y	초중등 교사
26	Z	초중등 교사
27	AA	초중등 교사
28	BB	초중등 교사
29	CC	초중등 교사
30	DD	초중등 교사
31	EE	초중등 교사
32	FF	미디어교육 강사
33	GG	미디어교육 강사
34	HH	미디어교육 강사
35	II	미디어교육 강사
36	JJ	미디어교육 강사
37	KK	미디어교육 강사
38	LL	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39	MM	이주배경청소년기관 관계자
40	NN	청소년지원기관 담당자
41	OO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42	PP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43	QQ	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44	RR	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45	SS	미디어교육기관 담당자
46	TT	대학연구센터 연구원
47	UU	시도교육청 담당자
48	VV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49	WW	초중등 교사
50	XX	초중등 교사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763-01
연구보고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인 쇄 2021년 5월 31일

발 행 2021년 5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현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